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WEF, 기후 대응 블록체인 보고서 발표...신뢰 문제 해법을 제시
2. 英 국세청, 대출·스테이킹 등 디파이 과세에 대한 의견 수렴 착수
3. JP모건, 전통금융 킬러앱으로 토큰화 주목...사모 펀드 자산 출시 추진
4. FTX, 일본 자회사 매각 계획 중단...운영 재개를 위해 KEIP 승인 요청
5. 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수정안 공개...SEC 주장 정면 반박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WEF, 기후 대응 블록체인 보고서 발표...신뢰 문제 해법을 제시

- 기후 문제의 범지구적 접근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시급성 강조...블록체인의 무결성·투명성 활용을 제안
-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통한 무결성·효율성 기반으로 투자 활성화, 민주적 접근 지원으로 신뢰 문제 해결

WEF가 환경 및 기후 분야는 지구 생태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 재해 이동 및 에너지 그리드 결함 등에서 범지구적 접근이 필요해 디지털 변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블록체인을 강력한 도구로 제시

▶ WEF, 기후 문제의 범지구적 접근을 위한 디지털 전환 시급성 지적...블록체인의 무결성·투명성 활용을 제언

- WEF는 기후 행동 확장을 위한 블록체인* 보고서를 발표하고, 블록체인은 ▲소유권 민주화 ▲투명성 및 무결성 개선 ▲탄소 배출 감소 및 격리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 등으로 다양한 효용을 제공한다고 강조

* WEF, 'Blockchain for Scaling Climate Action', 2023.4.25

- 하지만, 이런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개발과 구현은 이미 기후변화에 직면한 사람, 지역사회,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 WEF 보고서는 암호화폐 지속가능성 연합*의 웹3 기후 행동 연구그룹이 블록체인 혁신과 기후 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고, 재생 금융(ReFi)*과 탄소 중립과 블록체인 통합 등을 상세히 소개

* Crypto Sustainability Coalition : WEF가 '22년 10월 기후변화에 웹3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이니셔티브로, 3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탈 탄소화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개발을 진행

* Working Group on Web3 Climate Action

* Regenerative finance : 재생 및 보존 속성을 기반으로 자연 자산 가치를 추정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환경과 지역사회에 다시 분배하는 시스템 생성을 강조

- WEF는 소매, 금융, 제조 등 분야는 디지털화가 큰 진전을 보였지만, 기후 부문은 여전히 아날로그적이며 제한되고 오래된 데이터에 의존한다고 지적하고, 인류의 위협으로 대두된 이상 기후에서 기존 방법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

- 변화하는 지구 생태계 변화에 발맞춰 국경을 넘는 사회, 경제, 문화 및 정부 영역으로 확장이 필요하고, 글로벌 기후 인프라, 도구 및 조정 기술이 필요하며, 이 지점에서 블록체인이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강조

- 블록체인을 원격 센서, 드론 이미지, AI 등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과 함께 사용할 경우, 자산 및 탄소 회계 시스템에 배출 감소 및 격리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 구현이 가능

*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 일정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해당 결과를 제3자에게 보고·검증하는 다단계 프로세스

- 탈 탄소화 전반에서 블록체인의 채택 및 구현은 ▲사려 깊은 조정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친 유의미한 조치 ▲교육과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

- 안나 레르너 기후 연합 CEO는 온라인에 등장한 AI, 머신러닝, 원격 센서, 블록체인 등을 압축해서 보면, 새로운 자금 흐름이 대규모로 검증 가능한 기후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됐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

▶ (기후 목표) IPCC, '50년까지 넷제로 제시...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금융의 590% 성장 필요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을 '30년까지 50% 줄이고 '50년까지 순제로에 도달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고품질 탈 탄소화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

[지역별 기후금융 투자액과 IPCC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와 실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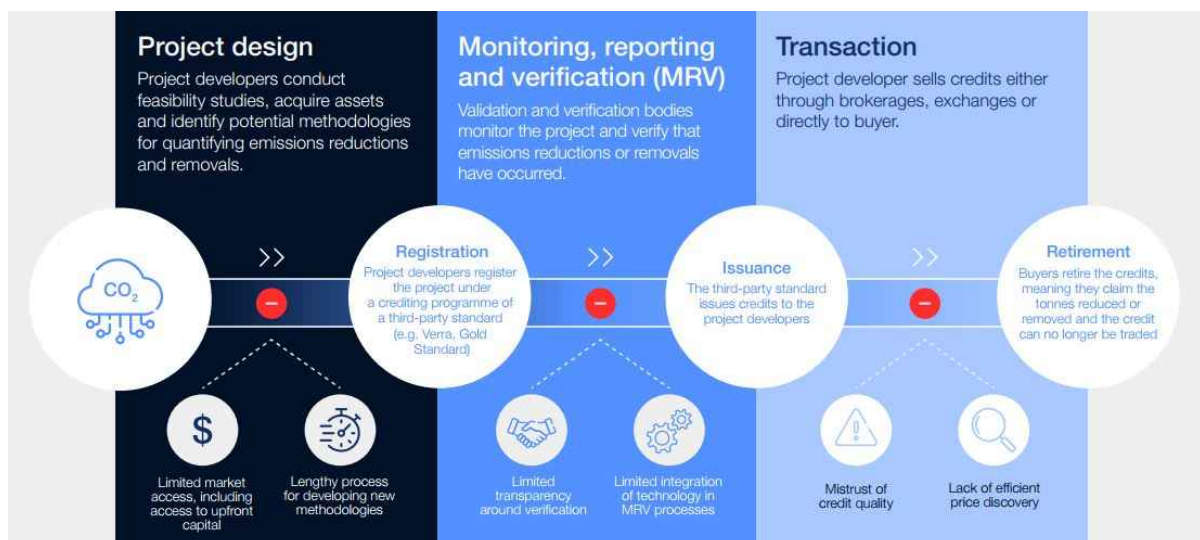
출처 : Buchner, Barbara, et al.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21, Climate Policy Initiative, 2021.

- IPCC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금융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년에 6,320억 달러의 규모에 달했지만, 이후 감소세에 진입했고, '3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금융이 연간 4조 3,500억 달러에 도달(590% 증가)해야 함*

* Climate Policy Initiative,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21', 2021.12.14

- WEF는 현 탄소 시장이 탄소 감소 조치 영향을 입증하고 검증할 수 없어 대중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진단하고, 이로 인한 파편화와 복잡성이 시장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평가
- WEF는 보고서에서 탄소 배출권 개발과 시장 출시에 이르는 효율적 가치사슬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자발적 탄소 시장 모델(VCM, voluntary carbon market)을 제시

[이상적인 VCM 가치사슬 모델]



출처 : "Carbon Markets Initiative", RMI, n.d./ WEF 재인용

▶ **(블록체인 가치) 프로그래밍 통한 무결성·효율성 기반, 투자 활성화 및 민주적 접근 지원 등으로 문제 해결**

-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은 프로그래밍을 통한 무결성·효율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후 행동의 속도와 규모를 크게 확장하는 활성화 인프라 계층을 제공하며, ▲신뢰와 야망 ▲투명성과 신뢰성 ▲투자 활성화 ▲민주적 접근 등을 지원한다고 평가
- **(신뢰 인프라)** 기후 위기 책임 소재에 대한 국가 간 갈등이 늘고, 전 세계 기후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데이터 인프라 및 상호운용성 표준의 중요성이 커짐
- **(투명성과 신뢰성)** VCM 시장은 '21년 20억 달러에서 '30년 500억 달러로 기하급수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탄소 시장이 정상 성장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무결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 투명성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
-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관리·거래하는 탄소 등록시스템(carbon registries)을 블록체인에 구축하면, 참여자는 모든 크레딧의 디지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가격 및 공급 조정이 가능해짐
- **(투자 활성화)** 디지털 자산은 자산 검색 및 구매를 간소화하며, 상대적으로 디지털 탄소 시장은 중개자 개입 필요성이 적은 특징을 가져, 블록체인을 통한 탈중개화는 더 많은 자금이 개발자에게 집중되게 함
- 디지털 시장은 프로젝트 개발자의 자금 조달 접근성을 높이고, 스마트 계약은 프로젝트 소유자의 가격 가용성을 높여 더 많은 협상 기회를 제공
- **(민주적 접근)** 기존 탄소 금융 시장은 탄소 배출권이 1톤 이상으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대형 기관 위주로 운영됐지만, 토큰화된(디지털) 배출권은 부분 소유를 지원해 개인 및 소규모 기업의 시장 참여를 보장
- 탄소 상쇄에 대한 접근 확대뿐 아니라, 기술을 권한 부여로 여기는 젊은 층의 기후 행동 참여를 촉진해 새로운 물결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

▶ **(재생 금융) 웹 3 확산으로 새로운 탈 탄소 생태계 형성, 기후금융·지속 가능 개발 중심으로 각 산업과 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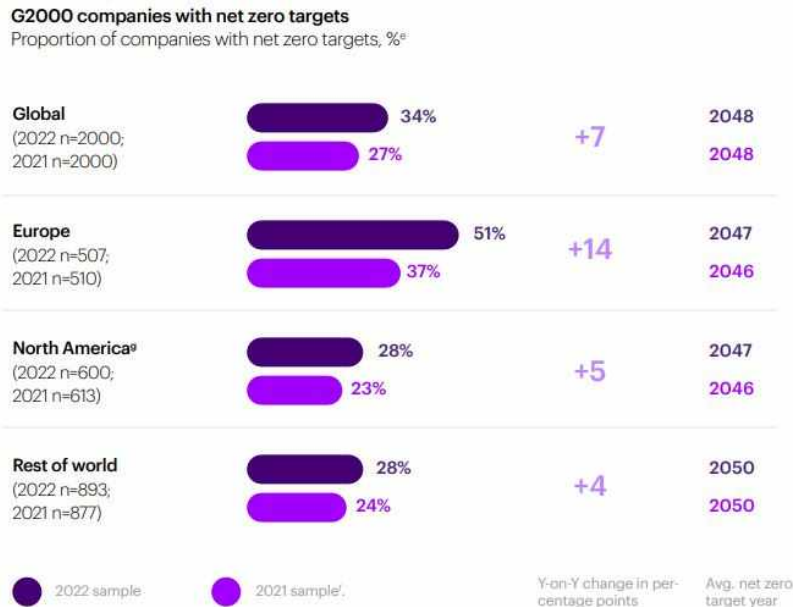
- WEF는 웹 3를 분산화, 접속, 직접 소유권, 오픈소스 및 상호운용 가능한 코드, 인센티브 기반 설계 및 검증 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인프라 진화로 평가하고, 재생 금융은 웹 3를 더욱 확장한다고 강조
- 재생 금융은 블록체인 기후 활동에서 기술,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금융, 재생 활동, 임팩트 투자, 기후 정의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접점을 이룬다고 강조
- WEF는 재생 금융 생태계 예시로 ▲디지털 탄소 시장 인프라 구축 ▲VCM을 위한 기후금융 ▲블록체인 마켓플레이스 ▲재생농업과 소작농 대출 ▲탄소 중립 블록체인 ▲실시간 검증 가능한 기후 데이터 집계 ▲데이터 저장의 탈중앙화 및 탈 탄소화 등을 제시

▶ **(동향 및 향후 과제) 기후 행동과 웹3의 결합 추세, 디지털 전환과 인증표준 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

- **(웹 3 활용 증진)** 세계은행(World Bank)은 기후 창고(Climate Warehouse) 이니셔티브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 탄소 데이터 및 가격을 조정하는 프로젝트(Climate Action Data Trust)를 진행했고, 골드만삭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채권 발행 플랫폼을 출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급망 관리에 블록체인을 도입

- **(넷제로(netzero) 약속 증가)** 세계 2000대 기업 34%가 넷제로 목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글, 스포티파이, 메타 등은 최근 9억 2,500만 달러를 모금해 약속을 초과했고, 블록체인 업계도 다양한 레이어 1 블록체인이 기후 영향 및 디지털 탄소 시장 지원을 강화함

[넷제로 목표를 공개한 세계 2000대 기업 분포]



출처 : Accenture, 'Accelerating global companies toward net zero by 2050', 2022.11

- **(디지털 MRV 솔루션 부상)** 각국이 수동 방식으로는 글로벌 기후 영향 측정 및 검증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디지털 MRV 전환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 솔루션은 검증 능력 향상을 위해 영향 인증서, 재생에너지 인증서 등을 도입해 기능을 고도화함
- **(데이터 소유권 및 상호운용성 관심 증가)** 각국은 UN의 글로벌 조기 경보 이니셔티브*와 같은 국경 간 이니셔티브 확대로 상호운용 가능한 데이터 인프라에 주목해, 분산원장과 블록체인 도입 추세가 증가
* UN's Global Early Warning Initiative : 위험한 날씨가 발생하기 전에 재해 위험을 감소를 목표로 31억 달러를 투자
- **(해결과제)** 탄소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급격한 성장이 필요하며, 이러한 속도와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 규제 기관의 인증표준, 매우 다양한 산업 이해관계자의 전례 없는 조정 등이 필요
- 또한, 업계가 직면한 평판문제 해소가 필요해, 시장 투명성과 기후 영향 검증 개선이 필요하며, 블록체인 및 웹3에 대한 복잡성 및 교육 격차 극복, 명확한 규제 도입이 뒤따라야 함

- WEF는 기후 행동 블록체인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이 ▲소유권 민주화 ▲투명성 및 무결성 개선 ▲탄소 배출 감소 및 격리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 제공 등으로 기후 행동에 다양한 효용을 제공한다고 강조
- 특히 블록체인은 기존 탄소 시장이 안고 있는 신뢰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품질과 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 탄소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

[출처]

- WEF, 'Blockchain for Scaling Climate Action', 2023.04.25.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영국]

英 국세청, 대출·스테이킹 등 디파이 과세에 대한 의견 수렴 착수

- 영 정부, 디파이와 현 세금 규정 충돌 발견...암호자산 허브 도약을 위해 명확한 세금 규정 도입 추진
- HMRC, 토큰 대여나 스테이킹은 대출자와 차입자 모두 CGT에서 제외...소유권리 처분 시 세금부과

영국 국세청(HMRC)*이 대출 및 스테이킹 등 탈중앙화 금융(DeFi)의 세금 처리 초안*을 공개하고, 대중 의견 수렴을 시작했고, 디파이 거래를 명확히 제시하고 디파이 거래는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제외하는 모델을 제안

* HM Revenue & Customs

* HMRC, The taxation of decentralised finance(DeFi) involving the lending and staking of cryptoassets, 2023.4.27.

▶ 영 HMRC, 디파이 과세 방안에 의견 수렴 착수...디파이 거래는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제외하는 방안 제시

- '22년 증거 요청(Call for Evidence)*에 따라 6월 22일까지 공개 협의가 진행되며, 디파이 수익 과세에서 세금부과 방식을 단순화하고 납세자 행정 부담을 줄이는 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함
- * 새로운 금융 입법에서 이점, 의도하지 않은 효과, 일관성 등에 대해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공개 협의
- 6월 22일까지 정부 기관, 싱크 탱크, 디파이 투자자·전문가·기업 등을 상대로 정부가 제안한 디파이 세금 처리에 대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함
- 정부는 입법 변경 초안에서, 디파이 거래에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디파이가 아닌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안을 제안
- 제안에 따르면, 디파이 거래는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스마트 계약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을 처음 전송 ▲차입자가 토큰을 반납할 의무가 있는 거래 ▲대출자는 빌려주거나 스테이킹 한 것과 동일한 양의 토큰을 인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
- 현재 진행 중인 공개 협의는 입법화 5단계 프로세스 중 두 번째 단계로, 이후 법률 초안 작성, 구현 및 모니터링, 변경사항 검토 및 평가가 뒤따를 예정

▶ 디파이 과세, ▲전통금융과의 의존성 증가 ▲시장 위기 시 보호 기능 미흡 ▲사이버 위협 등을 중점 고려

- HMRC는 디파이 과세 방안에서 전 세계 규제 당국이 디파이에 집중한다고 진단하고, 특히 ▲사이버 위협 및 기타 기술적 위험 ▲전통 금융시스템과 디파이 금융시스템 간 의존성 증가 ▲디파이의 시장 스트레스* 기간 동안 백스톱** 부족 등에 집중한다고 평가
- * Market Stress : 시장침체 우려가 시장 상황지표(MCI, market conditions indicators) 등으로 현실화하는 것
- * Backstop : 실패나 손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이나 보호를 제공하는 행위
- HMRC는 기존 규정에서 디파이 거래는 자산 소유권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 기관이나 유동성 공급자의 증여 및 판매로 인해 처분(Disposal)할 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근본적인

경제적 실체를 반영하지 않는 오류라고 지적

- 또한, 거래가 단계마다 자산 시장가치를 결정하고 기록해야 해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
- 새로운 제안은 디파이 거래를 세금 목적상 처분(Disposal)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디파이 이익을 본질적으로 수익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기타 소득세(new miscellaneous income charge)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
- 또한, 제안 프레임워크는 디파이 대출과 스테이킹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재자를 통해 암호화폐 대출 및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집중식 금융(CeFi)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
- 이번 제안에서 HMRC는 중립성, 공정성, 실효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했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더 넓은 규제 프레임워크 적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
- HMRC는 '22년 12월 영국 에이전트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세금감면 혜택을 암호화폐로 확대한다고 밝히는 등 암호화폐 과세 관련 규정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영 정부, 디파이와 현 세금 규정 충돌 발견...암호자산 허브 도약을 위해 명확한 세금 규정 도입 추진

- 암호화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에서 영국을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신속한 혁신이 가능한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암호화 자산에 대한 명확한 세금 및 규제 처리 확립을 목적으로 함
- HMRC가 '23년 4월 발표한 대출 및 스테이킹 등 디파이의 세금 처리 초안은 정부가 디파이 거래에 대한 기존 세법 적용을 검토하던 중 양도소득세 규정이 시장 상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
- 현행 세법은 암호화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이 일부 상황에서 대출 기관 또는 유동성 공급자에 의해 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실현된 이익이 없는 거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정부는 디파이 대출 및 스테이킹에 대한 추가 통찰력 확보를 위해 '22년 8월 증거 요청을 요구했고, 거의 모든 응답자가 디파이 활동에 대한 현 조세 규칙 적용이 어려워 변경해야 한다고 답변

▶ 3개지 옵션에 대한 증거 요청 진행, 응답자 대다수가 현 조세 규칙 변경에 동의

- 증거 요청은 3개 옵션에 대한 의견요청으로 진행됨
- **(옵션 1)** 암호화폐 자산을 과세 목적상 유가 증권으로 정의하고, 디파이 대출 및 스테이킹을 레포(repo)* 및 주식 대출 규정에 포함되도록 입법화하여 해당 디파이 거래를 양도소득세 거래에서 제외
*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 현물로 증권을 매도(매수)함과 동시에 사전에 정한 기일에 증권을 환매수(환매도) 하기로 하는 2개의 매매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
- **(옵션 2)** 레포 및 주식 대출에 적용되는 규정과 유사한 별도 규정을 입법화해 디파이 대출 및 스테이킹에 적용해 해당 디파이 거래를 양도소득세 거래에서 제외
- **(옵션 3)** 디파이 대출과 스테이킹에 무손실 무이득(no loss no gain) 처리를 적용해 자산이 경제적으로 처분될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하고, 대출 및 스테이킹을 위한 암호화 자산의 양도는 처분 가치를 취득 비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무이득 무손실(no gain no loss)' 거래로 간주

- 대다수 응답자는 옵션 1이 지나치게 규범적이어서 ▲디파이 거래 관련 우려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규제 규칙 적용에 혼란 초래 ▲일부 디파이 대출 거래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옵션 2는 영국이 디파이 시장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법률을 제정할 기회로 평가됐고, 레포 및 주식 대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란 평가와 일반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특정 대상을 제외하여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
- 동시에, 디파이 규정이 다른 세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레포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옵션 3은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메커니즘을 통해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토큰 과세에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행정적 부담과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증거 요청 피드백을 기반으로 정부는 관련 규정 변경을 결정하고, 각 옵션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옵션 2가 디파이 대출의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옵션 3보다 행정적 부담이 적으며, 향후 디파이 발전에서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

▶ **HMRC, 토큰 대여나 스테이킹은 대출자와 차입자 모두 CGT에서 제외...토큰 소유권리 처분 시에 세금부과**

- **(원칙)** 정부는 암호화폐 자산을 스테이킹 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소유권 처분을 CGT에서 반영하지 않고 대신, 암호화폐 자산이 경제적으로 처분될 때(전면적 판매 또는 상품 및 서비스로 교환될 때) 과세가 부과되는 옵션 개발을 추진
- 새 규정은 스테이킹 또는 대출된 토큰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것을 토큰 처분으로 간주하고, 해당 권리 처분 시점에 CGT가 적용되며, 다른 토큰을 스테이킹 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처분으로 간주하지 않음
- **(적용 범위)** 이런 원칙에 따라 디파이 거래를 ▲한 당사자(대출자)에서 다른 당사자(차입자)로 암호화폐 자산 전송 ▲차입 토큰을 대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스마트 계약에서 대출자에게 토큰 인출을 허용 ▲대출자 지시, 요청,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 자동 반환 ▲대출자에게 빌려주거나 스테이킹 한 동일한 유형의 토큰을 동일한 수량만큼 인출할 권리가 있는 경우와 같은 요소가 포함될 경우로 명시
- **(규칙 적용)** 해당 거래는 ▲대출자와 차입자 모두 CGT에서 제외되며 ▲빌려주거나 스테이킹 한 토큰과 관련된 모든 권리 판매는 토큰의 처분으로 간주되며 ▲소유권 판매 전에 발생한 모든 디파이 수익은 해당 권리를 처분한 시점에 대출자에게 과세되며 ▲대여 또는 스테이킹 된 토큰에 대한 권리 구매자는 대여 또는 스테이킹 토큰 취득으로 간주되며 ▲빌린 토큰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대출자는 스테이킹 된 토큰 또는 빌려준 토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함
- 디파이 대출 및 스테이킹 거래는 ▲토큰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 ▲대출 및 스테이킹 기간 ▲대출 및 스테이킹 토큰 반환의 라이프사이클을 보이며, 단계별로 의무와 권리를 분석
- 첫 단계는 소유자(대출자)가 암호화폐 자산을 다른 당사자(차입자/유동성 풀)에게 양도하거나 스마트 계약을 통해 토큰을 유동성 자산에 제공할 때 나타나고, 암호화폐 자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대출자로부터 차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CGT에서 제외됨
- 첫 단계는 소유자(대출자)가 암호화폐 자산을 다른 당사자(차입자/유동성 풀)에게 양도하거나 스마트 계약을 통해 토큰을 유동성 자산에 제공할 때 나타나고, 암호화폐 자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대출자로부터 차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CGT에서 제외됨

- 두 번째 단계는 대출 및 스테이킹 기간으로 표현되며, 기간은 다양할 수 있고 일부 계약은 몇 년을 초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대출자에게 두 번째 단계에서는 CGT 부과가 이뤄지지 않음
- 하지만, 이 단계에서 일부 대출자가 대출 또는 스테이킹 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권리를 매각하는 경우, 규정은 권리를 매각하는 시점에 관련 암호화폐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
- 세 번째 단계는 대출자가 빌려준 토큰을 돌려받는 단계로, 대출 또는 스테이킹 기간이 종료로 발생하며, 참가자에게 어떤 CGT도 발생하지 않으며, 대출자 파산으로 대출자가 원래 대출한 토큰보다 적은 토큰을 받는 경우, 반환되지 않은 토큰의 비율은 대출자가 파산할 때 처분한 것으로 간주

[일반적인 디파이 과세 시나리오]

사용자가 토큰 대여 및 스테이킹 이후에	CGT 이벤트	디파이 반환 과세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동일한 유형의 토큰을 동일한 수량으로 인출	없음	사용자 수령 시 과세
계약기간 동안 차용자는 기간이 끝날 때 토큰 일부/전체를 반환이 불가능	사실 확인 시 토큰 처분	사용자 수령 시 과세
계약 종료 시 차용인이 토큰 일부/전체를 반환하지 않음	계약 종료 시 토큰 처분	사용자 수령 시 과세
계약기간 동안 소유자가 토큰 권리를 제3자에 판매	권리 판매 시 토큰 처분	누적 수익이 판매 시 과세

출처 : Gov.uk

▶ 과세 당국, 디파이의 탈중앙화와 국경을 넘는 특성으로 새로운 도전 당면..포괄적 프레임워크 개발에 주목

- 디파이 거래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중앙화 금융 거래를 추적하고 과세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임이 입증됐다는 평가와 함께 규제 당국이 새로운 도전에 당면했다는 분석
- 특히,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구동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앙 기관이나 중개자 없이 거래를 실행하기 때문에 거래가 복잡하고, 암호화폐는 국경을 넘어 쉽게 거래되고 이전될 수 있어 당국이 디파이 거래에 대한 과세 관할권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HMRC가 디파이 대출 및 스테이킹에 대한 과세 개혁에 나선 것은 규제 당국 사이에서 디파이 분야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신호라는 평가
- 하지만, 동시에 정부와 규제 당국은 ▲납세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금융시스템 무결성을 유지하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프레임워크 개발 역량 등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

- 영국 국세청(HMRC)은 현 조세 정책과 디파이 거래가 충돌하는 것을 발견하고, 암호자산 허브 도약을 위해 명확한 세금 규정 및 규제 도입에 나서 디파이 세금 제안을 공개하고 공개 협의에 착수
- 디파이 거래는 서비스의 탈중앙화와 국경을 넘는 특성으로 과세 당국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의 확대를 명확하고 포괄적인 프레임워크가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는다는 평가

[출처]

- Coindesk, 'UK Tax Authority Proposes Changes to Treatment of DeFi Lending, Staking' 2023.04.28.
- Gov.uk, BIS, 'The taxation of decentralised finance (DeFi) involving the lending and staking of cryptoassets', 2023.04.27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JP모건, 전통금융 킬러앱으로 토큰화 주목...사모 펀드 자산 출시 추진

- 오닉스 레포 서비스, 대형 금융사를 고객으로 확보...플랫폼 성장으로 디지털자산 출시 다각화 고려
- 현 암호화폐 약세, 장기적 측면에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 평가...전통자산의 토큰화, 지속 추진 방침

미 최대 은행 JP모건이 암호화폐 시장침체와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토큰화(Tokenization)를 전통금융의 킬러앱이라고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전통자산을 토큰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 **오닉스 기반 레포 서비스, 대형 금융사를 고객으로 확보...플랫폼 성장에 따라 디지털자산 다각화 고려**

- JP모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도매 결제플랫폼 오닉스(Onyx)를 통해 7,0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대출 거래를 처리했고, JPM 코인을 통해 블록체인 은행 계정 및 토큰 거래를 지원함
- 골드만삭스, BNP파리바, DBS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오닉스 기반 레포 서비스(repo service)*를 이용하며, 15개 은행과 브로커 딜러가 서비스 가입을 앞두는 등 디지털자산 투자에서 큰 성과를 거둠
 - *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 현물로 증권을 매도(매수)함과 동시에 사전에 정한 기일에 증권을 환매수(환매도) 하기로 하는 2개의 매매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
- 오닉스 타이론 로반(Tyrone Lobban) CEO는 플랫폼이 지속 성장하고 있고, MMF(money-market funds) 등 전통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산의 토큰화와 담보 사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
- 또한, 토큰화는 기존 금융의 킬러앱이라고 강조하고, 오닉스 플랫폼은 장차 사모 펀드(Private Funds)를 포함한 더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
- 로반 CEO는 암호화폐 시장 약세와 규제 강화로 투자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JP모건과 오닉스는 디지털 자산 투자에서 달리진 것이 없다고 강조
- 현 시장가치는 장기적 측면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오닉스는 대규모 사용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리소스를 바탕으로 규제 당국 및 고객에 디지털자산 가치를 명확히 전달할 방침이라고 강조
- JP모건은 '23년 4월 보고서를 통해 미 금융위기는 만기 불일치에 따른 전통금융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비트코인은 재앙적 시나리오에서 회피(hedges) 수단으로 간주하여 금과 함께 상승했다고 분석

- 미 최대 은행 JP모건이 토큰화를 MMF 및 사모 펀드 등 전통금융을 활성화할 킬러앱으로 평가하고, 시장침체에도 불구하고, 전통자산의 토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
- JP모건은 최근 미 금융위기는 만기 불일치에 따른 전통금융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점점 암호화폐는 위기상황에서 금과 함께 회피 수단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

[출처]

- Coindesk, 'Tokenization Is 'Killer App' for TradFi: JPMorgan', 2023.04.27.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일본]

FTX, 일본 자회사 매각 계획 중단...운영 재개를 위해 KEIP 승인 요청

- FTX 저팬, '23년 2월 자산인출 재개로 주목...100억엔 이상 순 자산 등으로 많은 기업이 인수 검토
- 일본 암호화폐 라이선스 2종 보유가 장점으로 부각...FTX 저팬, 법원에 직원 인센티브 플랜 승인 요청

'22년 11월 파산한 미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일본 자회사 FTX 저팬의 운영 재개를 위해 매각 절차 중단을 발표했고, FTX 저팬은 알 법원에 KEIP* 승인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재개 행보에 나섬

* Key Employee Incentive Plan : 회사와 주요 임직원 간 이익 조정을 명시한 계획으로, 기간·금액·성과 측정 방법 등을 규정하며, 거래소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 준수 항목임

▶ FTX 저팬, 자신 인출 재개와 탄탄한 자산으로 치열한 인수 경쟁...운영 재개 결정으로 매각 절차 중단

- FTX는 많은 기업이 일본 자회사 FTX 저팬 인수에 관심을 보였지만,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는 운영 재개를 결정해 매각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
- FTX 저팬은 모기업 FTX가 파산한 '23년 11월 인출 일시중단에 들어갔지만, 파산이 진행된 모기업과 달리 지난 2월 법정화폐 및 암호화폐 자산인출을 재개하는 등 빠르게 정상화됨
- FTX 저팬은 '22년 9월 기준 약 100억 엔의 순 자산과 178억 엔의 현금 및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엄격한 규제에 모기업 파산에 따른 손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많은 기업이 인수를 검토함
- 일본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매우 합리적이라는 평가 속에, 일본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 주목받고 있으며, FTX 저팬은 일본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몇 안 되는 사업자로 높은 평가를 받음
- 특히 FTX 저팬은 결제 서비스 법과 일본 금융상품 거래법에서 규정한 ▲암호화폐 자산거래 서비스 제공 ▲제1종 금융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라이선스 2개를 보유함
- 해당 라이선스는 일본에서 취득까지 2년 이상 걸리는 등 매우 가치 높은 라이선스로 평가되며, 인수를 추진한 기업들도 이 점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해당 라이선스는 FTX가 일본에서 현물 및 파생상품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서도 꼭 필요해 FTX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지적

- FTX가 일본 자회사 FTX 저팬의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는 운영 재개를 결정하고, 매각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FTX 저팬은 핵심직원 인센티브 계약 승인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재개 행보에 나섬
- FTX 저팬은 모기업 파산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크지 않고, 일본 암호화폐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라이선스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많은 기업이 인수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짐

[출처]

- Cryptoslate, 'FTX confirms plans to restart its Japanese exchange', 2023.04.27.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수정안 공개..SEC 주장 정면 반박

-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SEC 규제를 반대...하원 공청회 거쳐 민주당과 협의 예정
- 업계, 암호화폐 규제의 중요한 변곡점 도달 진단...스테이블코인 향후 진로에 대한 명확성 제시 기대

미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 수정안을 공개하고,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SEC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부당하다고 주장

▶ 업계, 암호화폐 규제의 중요한 변곡점 도달 진단...스테이블코인 향후 진로에 대한 명확성 제시 기대

- 공화당 스테이블코인 초안 수정안은 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정의, 발행자 요건, 준비금 규정 등이 포함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 권한을 주(州) 규제 당국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김
- 4월 19일 공개된 초안은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한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주 정부의 승인을 받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에 등록하도록 했지만, 이번 수정안은 각 주 권고에도 불구하고 연준에 등록하지 않은 발행자에 대해 연준이 강력한 집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초안과 달리 수정안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은 제외됐고, 연방 보험 예금기관 소속 기업 등 연방 규제를 받는 비은행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 아니라고 규정해, 대부분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해 관심이 집중됨
- 공화당 의원들은 SEC가 디지털 자산 시장 참가자들에게 기본 기술과 호환되지 않고 적용되지도 않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요한다고 지적하고, 스테이블코인은 SEC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
- 이번 수정안은 하원 디지털 자산·금융 기술 및 포용성 소위원회(Subcommittee on Digital Assets, Financial Technology and Inclusion)의 '디지털 자산의 미래'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
* 공화당은 이번 안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새로운 논의와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언급
- 암호화폐 업계는 하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암호화폐 규제에서 중요한 규제 변곡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암호화폐 경제의 중추를 형성할 스테이블코인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

-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에 법안 초안 수정안을 공개하고, 스테이블코인 정의, 발행자 요건, 준비금 규정 등을 제시하고 인가 권한을 주 당국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
- 특히, 공화당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규정해 대부분 토큰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SEC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했고, 관련 업계는 중요한 규제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평가

[출처]

- Pymnts, 'Proposed Stablecoin Bill Would Give States Right to Regulate Crypto', 2023.04.25.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뉴욕 법무부, 새 암호화폐 규제안 제안..사기방지·역기능 차단 주력
2. 美 암호화폐 규제, SEC·의회업계 갈등 심화..의회 입법이 해법 지적
3. 이더리움 사용자,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인출보다 스테이킹 선호
4. 英 MICA에서 벗어난 독자 규제 주력..세금 혜택 등 산업 친화 전망
5. 전 세계 90개국 이 암호화폐 규정 도입...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順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뉴욕 법무부, 새 암호화폐 규제안 제안...사기방지·역기능 차단 주력

- 암호화폐 사기·역기능 방지에 집중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 제안...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법안으로 평가
- 암호화폐 거래소에 공개 감사·이해 상충 금지·사기피해 고객 배상 의무 규정...DFS 권한을 대폭 강화

뉴욕 법무부가 사기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 법안(CRPTO)*을 제안했고,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캘리포니아 등이 유사한 법률 채택을 고려해 관심이 집중됨

* Crypto Regulation, Protection, Transparency and Oversight Act

▶ 뉴욕주, 암호화폐 사기·역기능 방지에 집중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 제안...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법안 평가

- 뉴욕주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 법무장관이 암호화폐 산업에 만연한 사기와 역기능 차단에 중점을 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고, 암호화폐 기업 및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주(州) 등이 큰 관심을 표명
- 뉴욕주는 암호화폐 산업은 강력한 규제가 없어 급격한 시장 변동에 취약하며, 범죄 행위와 사기 은폐 및 조장에 악용된다고 강조하고, 이번 법안은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 상충을 제거하고, 여타 금융 서비스에 부과되는 규제와 일관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식적 조치를 부과한다고 강조
- 업계는 연방정부의 실질적 감독이 없어 매년 수억 달러의 암호화폐 사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뉴욕주 법안이 포괄적이고 매우 강력하다고 지적하고, 뉴욕주와 제임스 법무장관이 암호화폐 규제 모형화에서 주도적 인물로 부상했다고 평가
- 제임스 장관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산업에 법과 질서를 도입할 때라고 강조하고, 모든 투자는 투자자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보호하기 위해 규제되어야 하며, 암호화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
-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 검찰은 암호화폐 사기를 대표적 화이트칼라 범죄로 분류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주 등이 뉴욕주와 유사한 법안 채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 * '23년 2월 라스베이거스에 소재한 암호화폐 결제 회사 설립자가 수십 명의 투자자로부터 75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용의자가 수익금으로 집, 자동차, 보석 등 사치품을 구매했다고 발표
- * '22년 12월 연방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설립자이자 전 CEO인 새뮤얼 뱅크먼 프라이드를 각종 금융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그가 의도적으로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다고 발표

▶ CRPTO 법안, 암호화폐 거래소에 공개 감사 의무화·이해 상충 금지·사기 피해 고객 배상 의무 부여

- 뉴욕주 CRPTO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독립적인 공개 감사를 의무화하고,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발행인이 브로커나 토큰과 같은 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
- 은행이 연방 전자자금 이체법(federal Electronic Fund Transfer Act)에 따라 고객 피해를 책임지는 것과 유사하게 암호화폐 플랫폼에 사기 피해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해 고객에 대한 책임 의무를 부과
- 또한, 법안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

*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 (배경) 뉴욕주는 현 암호화폐 시장에 사기와 시장 실패를 예방하거나 차단할 규제가 부재해 수백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이 더 큰 피해를 본다*고 지적
- * 법안은 '22년 JP모건 체이스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저소득층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암호화폐를 구매했으며, '22년 암호화폐 가격 거품이 꺼졌을 때 손실 대부분을 저소득층이 담당했다고 지적

- 또한, 암호화폐 투자가 소수 커뮤니티를 상대로 직접 판매되기 때문에 사기에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여타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와 감독을 암호화폐 산업에도 적용해 암호화폐 산업 특유의 고위험 관행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이해 상충 금지) 테라·루나 사건 등에서 사기에 악용...암호화폐 거래소 등 공동 소유와 유사 활동을 금지

- 암호화폐 시장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경쟁을 감소시키는 이해 상충이 만연했지만, 현행법상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명백한 이해 상충에 대한 규제나 금지 규정은 없음
- 한 예로 암호화폐 기업 테라 폼랩스(Terraform Labs)는 루나(Luna) 토큰을 만들면서 대출 플랫폼(Anchor)을 만들어 투자 고객에게 20% 이자를 약속했지만, 투자자는 테라 폼랩스의 또 다른 토큰인 테라(Terra)를 구매해야만 20% 수익을 받을 수 있었음
- 테라 폼랩스는 루나와 테라를 소유한 채 지속 불가능한 고금리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의 실제 가치에 대해 투자자를 속였고, 결국 시장 붕괴 단초를 제공
-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CRPTO 법안은 다음 규정을 제시

[CRPTO 법안의 이해 상충 금지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암호화폐 발행자, 마켓플레이스, 브로커, 투자 자문사의 공동 소유를 금지하고, 참여자가 하나 이상의 활동 관여를 금지
2	암호화폐 브로커와 마켓플레이스가 자신의 계정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
3	마켓플레이스와 투자 자문사가 투자 고객 자금 보관을 금지
4	브로커가 고객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금지
5	보상을 목적으로 한 마켓플레이스의 투자 서비스 추천을 금지

출처 : Crypto Regulation, Protection, Transparency, and Oversight

▶ (재무정보 공개) 위험의 은폐 및 허위 공시 만연, 공개 감사 등 투자자 정보 제공 강화로 투명성 제고

- 암호화폐 기업은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공개 공시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의 실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대부분 암호화폐 기업은 재무 상태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공개함
- 한 예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Celsius)는 자체 토큰 셀(Cel)을 사들여 가격을 부풀리고, 존재하지 않는 허위 수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파산 신청 이후에도 수십억 달러의 유동성을 보유했다는 주장을 수차례 반복함
- CRPTO 법안은 암호화폐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규정을 제시

[CRPTO 법안의 재무정보 공개 강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암호화폐 기업은 의무적으로 독립적인 감사를 받고,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공개
2	투자자에게 발행자와 관련된 위험 및 이해 상충 공시를 포함한 중요 정보를 제공
3	마켓플레이스가 상장 기준을 수립하고 게시하도록 요구
4	브로커가 고객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금지
5	암호화폐 프로모터는 의무적으로 관련 암호화폐 자산 발행자에 대한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보고

출처 : Crypto Regulation, Protection, Transparency, and Oversight

▶ (투자자 보호) 피해보상 무방비 지적, KYC 도입으로 거래 위험 낮추고 플랫폼이 사기 피해보상을 규정

- 암호화폐 기업은 소비자 요구나 의무를 충족할 포괄적 감독 및 준비금 요건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특히 은행과 달리 고객 예치금이 없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뱅크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많은 암호화폐 기업이 파산했지만,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잃은 투자자들은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했고, 다수의 암호화폐 중개업체와 마켓플레이스는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으로 수십억 달러의 고객 암호화폐 자산을 도난당함*
 - * 법안은 제안서는 '21년에 사이버 범죄자들이 최소 140억 달러의 디지털 자산을 훔쳤다고 지적
- 현행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중개인 또는 플랫폼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의 현금을 보호하고, 투자한 암호화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음
- CRPTO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규정을 제시

[CRPTO 법안의 투자자 보호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고객 알기 제도(KYC)를 도입 및 성문화하여 중개인이 고객의 필수 사실을 알아야 함
2	암호화폐 중개인과 마켓플레이스가 KYC 조항을 준수하는 기업과만 거래하도록 의무화
3	미국 통화 또는 고품질 유동 자산으로 1:1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디지털 자산 설명에서 스테이블코인 용어 사용 금지
4	사기로 인한 무단 자산 이체나 송금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은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보상함

출처 : Crypto Regulation, Protection, Transparency, and Oversight

▶ (규제 권한 강화) 법무장관에 법 위반 집행 벌금 부과, 기업 폐쇄 등 권한 부여...DFS도 감독 권한 강화

- CRPTO 법안은 법무장관에 ▲법 위반 집행 ▲소환장 발부 ▲민사 벌금 부과 및 배상금, 손해배상금, 벌금 징수 ▲사기 및 불법 행위에 연루된 기업의 폐쇄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
- 또한, DFS에 뉴욕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희망하는 암호화폐 발행자, 디지털자산 중개인, 마켓플레이스, 투자 자문가에게 라이선스 부여와 관련 제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함
- (평가) 법안 제안에 대해 뉴욕주 상하원의원은 암호산업은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고, 세계의 금융 수도인 뉴욕은 이러한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제안을 크게 환영
- 뉴욕 커뮤니티 포 체인지 등 시민단체도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산업에 책임을 부여하고 소비자와 뉴욕주 전역의 저소득 유색인 커뮤니티 보호에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

▶ (뉴욕주 암호화폐 규제) '21년부터 미등록 기업 규제 착수, '23년 들어 잇따른 제소로 규제 강화

- CRPTO 법안 제안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평가
- **(23년 3월)** 뉴욕주는 증권 및 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자체 서비스를 마켓플레이스로 허위 표시한 쿠코인(KuCoi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미등록 암호화폐 플랫폼 단속을 강화함
- 뉴욕주는 쿠코인이 주에 등록하지 않고,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법을 준수할 때까지 쿠코인의 뉴욕 운영과 웹사이트 접속을 금지
- **(23년 2월)** 뉴욕주는 증권 및 상품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공한 암호화폐 플랫폼 코인엑스(CoinEX)를 제소
- 뉴욕주는 코인엑스가 주에 등록하지 않고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해 뉴욕 마틴법(Martin Act)*을 위반했다고 제소했고, 법원에 코인엑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영구 운영 중단을 요구
* 뉴욕의 사기방지법으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법으로 유명하며, 법무부에 증권사기 관련 조사수행, 혐의자에 대한 민사, 형사 조치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
- **(23년 1월)** 뉴욕주 등 주 연합은 셀시우스 전 CEO를 암호화폐 플랫폼 넥소(Nexo)를 통해 2,400만 달러를 불법운영해 투자자를 속이고 회사 재무 상태 은폐 혐의로 제소
- **(22년 11월)** 제임스 법무장관은 의회에 퇴직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채택을 촉구
- **(22년 6월)** 암호화폐 시장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 뉴욕 시민에게 암호화폐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고,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를 받은 암호화폐 플랫폼 BlockFi Lending LLC와 100만 달러에 합의
- **(22년 3월)** 가상화폐 투자자와 세무사를 상대로 가상 투자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 및 납부를 요구하는 납세자 통지문을 발표
- 뉴욕주는 통지문에서 암호화폐 세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허위 신고는 뉴욕 허위 청구법(False Claims Act)*의 세금 조항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조세 재무부와 국세청 지침 준수를 권장
* 뉴욕시에 시민이 세금 관련 허위 사실을 제출할 경우, 3배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
- **(21년 10월)** 주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에 영업 중단을 명령했고, 2개 미등록 대출 플랫폼은 영업 중단을, 3개 플랫폼은 해당 활동과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시

- 뉴욕주가 암호화폐의 사기방지 및 역기능 차단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법안(CRPTO 법안)을 제안했고, 연방정부의 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아 시장 관심을 집중시킴
- CRPTO 법안은 거래소의 이해 상충을 금지해 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개 감사와 투자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였으며,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플랫폼 배상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

[출처]

- USA Today, 'New cryptocurrency bill targets crypto crime and 'rampant fraud' across US' 2023.05.05.
- ny.gov, 'Attorney General James Proposes Nation-Leading Regulations on Cryptocurrency Industry', 2023.05.05.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암호화폐 규제, SEC·의회·업계 갈등 심화...의회 입법이 해법 지적

- SEC, 증권법 준수는 기업 의무 vs 업계, 90년 전 법률 강요는 비합리 vs 의회, 새 규정 도입 놓고 이견
- 법률 전문가, SEC의 규칙 제정과 의회 입법을 장기 해법으로 제시...양당의 견해차 커 장기화 불가피

미국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싸고 의회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양당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SEC는 기존 법률 적용을 강행하고, 업계는 명확성 부족을 지적하는 혼선이 고조된다는 지적

▶ SEC, 증권법 준수는 기업 의무...업계, 90년 전 법률 강요는 비합리적...의회, 새 규정 도입 이견으로 갈등

- SEC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 난맥을 상징하는 인물로 부상했고, 업계와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토큰은 토큰이며, 암호화폐 기업은 현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
- 겐슬러 위원장은 '23년 4월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 출석해 암호화폐 기업은 법을 준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며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주장
- 겐슬러 위원장 주장에 대해 디지털자산 업계와 의원들은 최대 90년 전에 전통금융에 도입된 증권법은 중개자가 없는 비즈니스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됐다고 반박
-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의장은 겐슬러 위원장에게 디지털자산 기업은 법 적용 여부도 모른 채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다고 지적
-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SEC는 '23년 4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테라(Terra)·루나(Luna) 붕괴와 관련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Genesis Global Capital) ▲제미니 트러스트 컴퍼니(Gemini Trust Company) ▲암호화폐 거래소 벅시 디지털(Beaxy Digital)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 랩스 PTE(Terraform Labs PTE) 등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집행 조치를 적용해 업계의 반발이 더욱 고조됨
- SEC 조치에 대해 디지털자산 업계는 SEC가 암호화폐 기업이 준수할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거부한 채, 수년째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사후 통보를 되풀이한다고 비난 강도를 높임
-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암호화폐 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의회에 디지털 상품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 갈등 양상이 더욱 복잡해짐

*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규제 명확성) SEC와 코인베이스 정면 대결 양상...암호화폐 기업의 SEC 등록,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적

- 업계와 SEC는 규제 명확성을 높고 갈등하며, SEC 등록 여부가 최대 사안으로 부각됨
-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기업에 SEC에 와서 등록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업계는 SEC가 암호화폐 기업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응수

- 지난해부터 SEC 등록을 추진해 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최근 SEC로부터 제소 방침을 통보받고 그동안 SEC와 논의해 온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법적 다툼에 나선다고 발표
- '23년 3월 코인베이스는 자사 스테이킹 서비스(Coinbase Earn, Coinbase Prime, Coinbase Wallet)에 대해 SEC의 웰스 통지*를 받았다고 공개하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진행할 계획이라 발표
* Wells notice : SEC가 기업에 증권법 위반에 대한 집행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리는 것으로 공식적인 고발이나 소송은 아니지만, 통상 소송 전 단계로 평가됨
- 코인베이스는 '22년 여름부터 SEC 등록을 추진해 각종 문의와 다양한 제안을 제공했지만, 단 한 번도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고 공개하고, SEC는 암호화폐 기업의 등록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
* 코인베이스는 웰스 통지에서 SEC가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만 언급하고,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하는 코인베이스 자산 식별을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강조
- 코인베이스는 '22년 논의 초기 단계에서 SEC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방법이 없어, 등록 경로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코인베이스는 당시 수백만 달러의 법률 자문비용을 들여 두 개 등록 모델을 개발해 SEC에 제공했다고 강조
- 코인베이스는 개발 모델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코인베이스의 SEC 등록 방침을 전달하고 보유 자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 역시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
- 코인베이스는 SEC와 9개월간 30여 차례 만났고, '22년 12월 SEC에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요청했고, SEC 직원은 '23년 1월에 피드백을 제공하기로 동의했으나, 회의 하루 전날 SEC는 약속을 파기하고 집행 조사로 번복을 통보했다고 주장

▶ (규정 도입) 하원 금융소위원회 중심으로 착수, '민주당은 불필요·공화당은 꼭 필요' 견해 엇갈려 갈등 노출

- 미 의회는 수년째 디지털 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며, 올 1월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디지털 자산, 금융 기술 및 포용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ttee on Digital Assets, Financial Technology and Inclusion) 구성이 큰 진전으로 평가됨
- 하원 소위원회는 '23년 4월 디지털 자산 분야의 규제 공백 파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현행법 개정에 대해 양당이 격렬하게 충돌해 견해 차이만 확인
-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민주당 최고위원은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유해 암호화폐를 위한 새롭고 특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소위원회 랭킹 위원*인 스티븐 린치 의원도 규칙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의회 또는 주 입법위원회에서 소수 정당의 가장 선임 의원을 의미
- 하지만, 공화당 위원들은 두건의 공청회에 앞서(23.4.27)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위한 명확한 규칙을 통과시키고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디지털 자산, 금융 기술 및 포용성 분과위원회 프렌치 힐(French Hill) 위원장은 오랜 시간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는 검증된 원칙을 준수하면서 새로이 필요한 규제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실행가능한 솔루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
-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청회와 함께 하원 농업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회도 같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해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하원은 5월에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한 소위원회 공동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어 미 의회의 암호화폐 규정 도입 논의는 지속될 전망

▶ **법원, SEC의 모호성 지적...증권인지 상품인지 확신하지 못하며, 결정에서 스스로 동의하지 못한다 지적**

- '23년 3월 미 법원은 암호화폐 대출업체 보이저 디지털의 바이낸스닷컴유에스 매각 제안에서 SEC가 모호한 혐의 제기를 비판하며, 당국이 우려 해소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차단하려고만 한다고 지적
- SEC는 보이저의 암호화폐 대출 사업이 미등록 증권 판매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이저의 바이낸스 거래가 미국 증권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매각을 반대
- 하지만, 보이저 매각이 미 증권법 위반이냐는 판사 질문에 대해 SEC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함
- 판사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며, 심지어 집행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자신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

▶ **업계, 등록 절차·경로 제시하면 준수 입장..SEC의 규칙 제정과 의회 입법이 문제 해결 열쇠라는 지적**

-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는 SEC가 등록 절차와 경로를 알려주면 등록이 필요한 비즈니스의 경우 등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SEC가 암호화폐 기업의 등록을 가로막는다고 주장
- 코인베이스는 '23년 4월 SEC를 상대로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요구한 '22년 6월 제기한 청원*에 대해 공개적 답변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SEC와 암호화폐 기업 간 다툼이 법정으로 확대됨
- * 코인베이스는 청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식별하는 잠재적 규칙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반으로 제공되고 거래되는 증권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도입하고 채택할 것을 요청
- 법률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제 SEC와 의회에 넘어갔다고 진단하고, SEC의 규칙 제정과 의회의 입법을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
- 이를 통해 시장과 사용자의 규제 프레임워크 이해를 촉진하고, 프레임워크가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파악하는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
- SEC 내부에서도 암호화폐 규칙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해, 헤스터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지난 1월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5월에도 SEC가 암호화폐의 기존 규제 편입 방법과 조정에 구체적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
- 업계는 SEC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및 관할권 문제는 의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암호화폐 규제를 주도하는 SEC와 새 입법을 추진하는 공화당 의원과 규제 명확성을 요구하는 암호화폐 기업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는 등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됨
- 법률 전문가들은 SEC의 새로운 규칙 제정과 의회 입법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지적하지만, 새로운 규제 도입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가 커 미국 암호화폐 규제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

[출처]

- Pensions & Investments, 'SEC, Congress and industry clash over crypto regulation', 2023.05.05.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이더리움 사용자,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인출보다 스테이킹 선호

- 업계, 이더리움 출금 대기자가 몰려 가격 폭락 우려를 제기, 실제로는 스테이킹 금액이 크게 증가
-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반영됐다는 평가,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 부상으로 연결

‘23년 4월 이더리움 출금을 지원하는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 스테이킹 예치금이 이더리움 출금을 1억 8,900만 달러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사용자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반영됐다는 평가,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 부상으로 연결

-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중 가장 역사적 사건으로 꼽히는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스테이킹의 가치를 더욱 높여 시장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
 - 업계는 ‘20년 12월 스테이킹 기능이 처음 도입된 이후 출금 시기를 기다려 온 사용자들이 메인넷 자금 인출이 가능해진 상하이 업데이트 이후 대거 등장해 이더리움 가격 폭락 우려까지 제기됨
 -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크라켄을 이용하는 미국 스테이킹 고객 일부와 코인베이스가 55,000개 이더리움 출금 대기 외에는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음
 - 오히려 스테이킹 이더리움 금액이 매우 증가해, 이더리움 출금 주소보다 이더리움 입금 주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3년 5월 6일 기준 이더리움 순 금액은 1억 8,900만 달러(97,586 ETH)를 기록
 - 이는 이더리움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한 높은 추가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게 형성됐음을 의미하며, 스테이킹 수요 증가는 이더리움 가격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 크라켄 미국 스테이킹 고객 이탈은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나서자 크라켄은 ‘23년 2월 3,000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하고 미국인 대상 스테이킹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현 이더리움 스테이킹 시장은 유동성 스테이킹* 부각을 촉진하고, 관련 분야에서 전체 시장의 79%를 차지한 리도 파이낸스가 최대 수혜자가 부상한 것으로 분석됨
- * Liquid staking : 이더리움을 프로토콜에 예치하면 해당 프로토콜이 사용자들 대신해 스테이킹하고 대가로 스테이킹 한 위치를 나타내는 또 다른 토큰을 보상으로 받음

- 이더리움 출금을 제공하는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20년 스테이킹 이후 출금 시기를 기다린 고객들이 대거 몰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스테이킹 예치금이 상하이 업그레이드 전보다 대폭 증가함
-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높은 기대가 반영됐다는 평가 속에,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해당 시장의 79%를 차지한 리도 파이낸스가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분석

[출처]

- Decrypt, ‘Ethereum Staking Deposits Outpace Withdrawals by \$189M in ETH’, 2023.05.06.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영국]

英, MiCA에서 벗어난 독자 규제 주력..세금 혜택 등 산업 친화 전망

- 영국, 브렉시트 전부터 암호화폐 규제 적용...EU MiCA를 넘어설 프레임워크를 1년 이내 도입 계획
- 유연한 라이선스·세금 혜택 제공 등 산업 친화적 접근 전망...AML/CFT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

EU가 암호화폐 규제안 MiCA를 최종 승인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개발·도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고, 특히 EU와 경쟁 관계에 있는 영국은 MiCA보다 효율적 프레임워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됨

▶ 유연한 라이선스와 세금 혜택 제공, MiCA보다 산업 친화적 전망..AML/CFT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

- 영국은 브렉시트('21.1) 전부터 암호화폐 규제를 적용했지만, 지난해부터 EU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암호화폐 법률 및 규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EU 따라잡기에 그칠지, EU를 추월할지에 관심이 집중됨
- '19년 FCA*는 암호화폐를 특성과 용도에 따라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 ▲전자화폐 토큰(e-money tokens) ▲규제되지 않는 토큰(unregulated tokens)으로 분류하고 주요 지침을 발표
 -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독립적 영국 금융 규제기관으로 금융기업 규제, 시장 무결성 유지 등을 목표로 함
-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에서 ▲소비자 보호 ▲혁신 촉진 ▲금융 범죄 차단 등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도입에 주력하며, 최근 경제 재무부 그리피스 장관은 1년 내 프레임워크 출시를 언급
- 영국 프레임워크는 MiCA보다 더 광범위한 규정을 포함하는 높은 품질과 진보적인 금융법을 목표로 하며, 조만간 도입이 예정된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FSMB)*과 밀접히 연결될 예정
 -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 : 암호자산 규제를 영국 금융 서비스 법에 포함해 재무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
- 또한, '23년 2월 재무부(HMT)가 암호자산 규제 초안을, 4월 국세청이 암호자산 과세 방안을 공개하는 등 디지털 결제 자산에 대한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해 각 부처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
- 영국 프레임워크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의 혁신을 장려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 친화적 내용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유연한 라이선스 및 세금 혜택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반면, 금융 범죄 차단에 집중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금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에서는 MiCA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

- EU MiCA가 최종 승인되어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개발 움직임이 촉진됐고, 특히 영국이 EU 추월을 목표로 새로운 프레임워크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성과에 관심이 집중됨
- 영국은 소비자 보호, 혁신 촉진, 금융 범죄 차단에 초점에 맞춰 MiCA보다 포괄적이고 산업 친화적인 프레임워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1년 이내 출시를 목표로 함

[출처]

- Beincrypt, 'How Will Pending UK Regulation Transform Its Crypto Market, Compared to the EU?' , 2023.05.02.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전 세계 90개국이 암호화폐 규제 도입...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順

- '22년에만 28개국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채택, 빠른 확산 속에 권역별·국가별 편차가 커졌다는 분석
- 암호화폐 규제 도입국, 유럽(32개국) >아시아(17개국) >아메리카(3개국)...일본·스위스, 규제 선진국 평가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분석 결과*에서 전 세계 90개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했고, 지난해 28개국이 새로운 암호화폐 법률을 채택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Cointelegraph Research, Blockchain Regulation Database, 2023.01

▶ 암호화폐 규제 도입국, 유럽(32개국) >아시아(17개국) >아메리카(3개국)...일본·스위스, 규제 선진국 평가

- 보고서는 암호화폐 규제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규제 환경이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하고, 일본과 스위스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가장 앞섰다고 평가*
 - * 일본은 명확한 규정으로 소비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구현한 초기 도입자(early mover)라고 평가했고, 스위스는 '22년 11월 자금 세탁금지법을 개정해 신원확인 회피를 위한 결제 분할을 차단했다고 평가
- 권역별 편차도 심해 유럽이 가장 도입이 활발하고, 그 뒤를 아시아가 잇고 있으며, 아메리카는 포괄적 규제 도입이 3개국에 그쳐 국가마다 다른 접근을 보인다고 평가
- **(유럽)** 32개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했고, 22개국이 불투명한 상태며, 1개국이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
- EU는 '23년 3월 자금세탁방지 관련 6번째 지침을 도입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신원확인 의무화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의무화했고, 기존 금융 규제와 동일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논의를 진행
- **(아시아)** 15개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했고, 23개국이 불투명한 상태며, 7개국이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
- 중국은 암호화폐 ICO를 금지한 이후 금융 불안정과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거래소와 채굴 산업을 금지하고 있고, 베트남도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을 금지함
- **(아메리카)** 3개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했고, 11개국이 불투명하며, 1개국이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
- 미국은 적극적인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괄적 규정이 없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의 남미는 규제 초기 단계로 국가마다 다른 접근을 취함

- 글로벌 규제 분석 결과, 지난해 28개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새로 채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빠르게 확산됐고, 권역별 국가별 규제 환경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 일본과 스위스가 암호화폐 규제 선진국으로 평가되며, 권역별로는 유럽이 32개국이 규제를 도입해 가장 많고, 아시아가 15개국으로 뒤를 이으며, 아메리카는 3개국으로 가장 뒤쳐진 것으로 나타남

[출처]

- Cointelegraph, 'Examining global successes and challenges in regulating crypto: Report', 2023.05.04.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EU, 과세 행정협력지침 승인..보고 대상에 NFT 및 외국 기업 포함
2. 코인베이스 SEC 소송, 상공회의소 등 反 SEC 결집해 규제 완화 요구
3. SEC 수탁 제안, 자문사암호자산 간 단절 요구..JP모건 등 강력 반발
4. 美 하원 공동 청문회, 암호화폐 규제에서 EU와 영국 주목 요구
5. 유럽 블록체인 업계, 스마트 계약 관련 데이터 법 협상에 총력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EU]

EU, 과세 행정협력지침 승인...보고 대상에 NFT 및 외국 기업 포함

- EU, 암호화폐 과세정보 공유를 위한 행정협력지침(DAC 8) 승인...과세 등록·신고·국가 간 협력 대폭 확대
- DAC 8 기반 세금 투명성 규칙...MiCA 규정, 자금이체 규정, OECD 과세 보고 프레임워크와 완전 일치

EU가 4월에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MiCA)의 최종 승인에 이어 5월 들어서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세무당국 간 정보공유를 위한 조세 투명성 규칙*에 합의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를 선도함

* New Tax Transparency Rules for Crypto-Assets : EU 내 사기 방지를 위해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기존 행정협력지침 수정에 합의했고,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26년부터 시행될 예정

▶ EU, 암호화폐 과세정보 공유를 위한 행정협력지침(DAC 8) 승인...과세 등록, 신고, 국가 간 협력 대폭 확대

-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3년 5월 암호화폐 과세 정보공유를 위한 행정협력지침(DAC 8)*을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암호화폐 과세 관련 등록, 신고 의무와 각국 세무 협력 범위를 크게 확대함
- * 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8 : MiCA가 과세 내용을 별도 규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22년 12월 제안된 행정협력지침으로 EU 회원국 간 과세정보 수집 및 교환을 허용함
- DAC 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 보고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 27개국 세무당국에 암호화폐 자산 거래 정보와 고액 자산가의 사전 세금 판결 정보를 공유함
- *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 보고 대상이 되는 암호자산, 중개자, 서비스 공급자 등을 정의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관련 정보의 자동 교환을 규정
- 폭넓은 과세 정보공유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조세 회피 및 탈세 범죄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며, DAC 8 합의를 MiCA 도입에 이은 암호화폐 규정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EU의 대표 사례로 평가
- 향후 DAC 8이 최종 채택되면 EU에서 활동하는 모든 암호화폐 기업은 사용자 거래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로화로 묶인 EU 경제 체계에 암호화폐가 본격 편입되는 계기가 될 전망
- DAC 8은 각국 승인을 거쳐 '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EU는 조세 회피 감소로 약 24억 유로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EU, 암호화폐 단일 과세 지향...첫 단계로 과세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행정협력 지침 도입

- EU는 지난해 MiCA 도입과 함께 암호화폐의 EU 단일 조세 제도 검토에 나서 일부 회원국 재무부와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고, 여기서 관련 법안 및 지침 도입을 결정
- 가장 먼저 암호화폐 기업이 디지털자산 소유 개인이나 기업의 세부정보를 수집해 세무당국과 공유하는 규정 도입을 결정하고, '22년 12월 과세정보 지침 및 정보공유를 위한 행정협력지침(DAC 8)을 발표
- EU는 암호자산 단일 과세가 크게 임박한 사안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27개 개별 관할권에서 암호화폐 기업과 사용자 운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

- DAC8은 '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EU 전역의 암호자산 세무 정보 확보를 기반으로 '27년부터 EU 전역의 암호화폐 단일 세금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이사회는 각국 과세당국은 암호자산 분류·평가·관리, 공정하고 효율적 세금 부과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고, 암호자산 과세 관련 모범 사례 발굴 및 공유 촉진을 위해 회원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

▶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투명성 규칙(DAC 8),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와 고액 자산가 규제로 구성**

- '22년 12월 유럽이사회는 세금 사기 및 탈세 위험감소를 위해 암호화폐 기업에 암호화폐 고객의 거래 내역을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을 제안하고 DAC 8 개정안을 공개
- EU에서 '11년 시작된 EU 행정협력(DAC)은 그동안 총 6번 개정됐고, 개정을 통해 납세자 범위와 보고 의무가 부여된 데이터 유형이 꾸준히 확장됨

[EU DAC 변천 과정]

DAC	의무 보고 및 교환 정보	적용 시기
1	고용 소득, 연금, 관리 수익, 부동산 및 생명보험 소득 및 자산	2013. 01 / 2015. 01
2	재무 계정 데이터(계정 잔액, 이자 및 배당금 수령액 등)	2016. 01
3	기업의 국경 간 세금 판결 및 사전 가격 조정 적용	2017. 01
4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수익, 이익, 납부 세금, 직원 수 등 정보)	2017. 06
5	자금세탁방지 프레임워크를 통해 수집된 소유권 및 실사 정보	2018. 01
6	중개자(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의 잠재적 세금계획	2021. 01
7	디지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벌어들인 소득	2023. 01/ 2024. 01

출처 : European Paliament, Crypto Regulation, Tax transparency rules for crypto-asset transactions(DAC 8)

- 위원회는 암호화폐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욱 큰 조세 협력 없이는 조세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탈세 위험이 고조된다고 강조하고, '22년 3월 공개협의를 시작해 '22년 12월 새로운 제안을 공개
- DAC 8은 EU 사용자의 암호화폐 거래 수익과 이익 관련 정보 교환에 중점을 두고, 암호자산 증가에 따른
▲암호자산 세금 항목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통일된 세법 마련 등 다양한 과세 문제를 개정
- DAC 8은 암호자산 보고와 관련된 각종 세부 사항을 규정한 프레임워크(보고 대상 암호자산 기업, 보고 대상 암호자산, 보고 대상 거래, 보고 요건 등)와 고액 자산가 규제 정책, 처벌 규정 등을 새롭게 정립

▶ **(암호화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 OECD CARF와 MiCA 정의를 바탕으로 과세 보고 요건을 규정**

- DAC 8은 EU 암호화폐 규정인 MiCA의 암호화 자산 및 서비스 공급자 분류와 정의를 바탕으로 OECD의 과세 보고 프레임워크(CARF)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에 의무를 부과
- 암호자산 공급자*와 암호자산 운영자*를 과세 보고 해야 하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RCASP)*로 구분하고, DAC 8 규정에 따라 세무당국에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

* Crypto-asset providers : 하나 이상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3자에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체로 MiCA 정의와 동일

* Crypto-asset operator :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를 제외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Reportable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 **(보고 대상 암호자산 제공기업)** RCASPs는 규모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EU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하도록 함
- **(보고 대상 암호자산)** 이들은 전자화폐(e-money), 전자화폐 토큰(e-money tokens), CBDC 등 모든 투자 및 결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보고 대상임
- **(보고 대상 거래)** 법정통화와 보고 대상 암호자산의 거래는 물론 보고 대상 암호자산 간 국내·외 교환, 거래, 이전을 보고해야 함
- **(보고 요건)** RCASPs, 개인 거래자, 암호자산별로 보고 요건을 제시하고, 정보의 비교 및 교차 확인을 위해 사용자 및 암호자산별로 세분화해 보고하도록 규정

[암호화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의 보고 요건]

RCASPs	개인 사용자	보고 대상 암호자산
이름	이름	암호자산 전체 이름과 형태
주소	주소	암호자산과 법정 화폐 교환액, 거래 수
TIN	TIN	암호자산 가치 및 총 수익금
인증 번호 및 글로벌 법인 식별	거주국	호스팅 되지 않은 분산원장 전송액
-	생년월일 및 출생지	소매 지불 거래액

출처 : European Paliament, Crypto Regulation, Tax transparency rules for crypto-asset transactions(DAC 8)

- '26년 1월부터 규정을 적용하고, 동 규정 적용 전에 MiCA가 적용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보고된 정보 교환이 표준화 보고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행조치 등의 실질적 조치를 추진해야 함

▶ **(고액 자산가 규제) 100만 유로 이상의 자산 보유자의 세금 판결을 27개국이 공유...유명인 탈세 방지 목적**

- 기존 DAC는 과세당국의 국경 간 세금 판결 정보공유를 기업으로 한정했지만, 이번에 이를 고액 자산가로 확대*해, 자산가 개인에게 발행된 국경 간 세금 판결도 다른 회원국과 교환하도록 함
- * 100만 유로 이상의 자산 및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개인을 의미하며, 연예인, 정치인, 유명인의 탈세 의혹 방지를 목적으로 규정에 포함함
- 이번 개정에서 DAC에 의해 교환되는 정보는 세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언급했고,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 시행에 필요한 조치에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
- 또한, DAC 1에서 규정한 각종 개인 소득 관련 정보제출을 강화해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배당금 소득 등을 '비 수탁 배당소득(non-custodial dividend income)' 항목으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최소 처벌 규정]

구분	DAC 2 (금융기관)	DAC 4 (다국적 기업)	DAC 6 (중개자)	DAC 7 (플랫폼)	DAX 8 (RCASP)
매출 600만 유로 미만 법인	50,000	NA	50,000	50,000	50,000
매출 600만 유로 이상 법인	150,000	500,000	150,000	150,000	150,000
개인	NA	NA	20,000	20,000	20,000

출처 : European Paliament, Crypto Regulation, Tax transparency rules for crypto-asset transactions(DAC 8)

- 위원회는 처벌 규정에서 최소 수준의 처벌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전체 DAC에 적용할 것을 제안

- 위원회는 규제 대상 암호자산 제공기업이 ▲보고 내용의 25% 이상이 불완전하거나 허위거나 ▲두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

▶ **DAC 8 기반 세금 투명성 규칙..MiCA 규정, 자금이체 규정, OECD 과세 보고 프레임워크와 완전 일치**

- 위원회는 '23년 5월 16일 새로운 세금 투명성 규칙 도입에 대한 합의를 발표하고, 새로운 규칙이 MiCA 규정, 자금 이체 규정(TFR), OECD의 과세 보고 프레임워크 이니셔티브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
- DAC 8 제안은 직접 과세를 목적으로 암호자산에 대한 정보보고 및 교환 의무를 명시
- ① 보고 의무가 부과된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기업은 규모와 위치에 무관하게 EU에 거주하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내외 거래는 물론 필요에 따라 NFT에도 적용
- ② 금융기관에 전자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 ③ 100만 유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정보 교환 범위를 확대해 회원국은 '20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정보를 교환할 방침
- ④ 보고 의무 위반 등 심각한 규정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수준의 처벌을 명시
- 위원회는 DAC 8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규정 준수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회원국마다 보고 요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EU 전체에서 단일 규칙 적용이 더 쉽다고 강조
- 또한, 보고 정보가 대부분 암호자산 서비스기업이 일상적 운영에서 사용하는 정보들로 생성이 어렵지 않고, 모든 범주 기업에 공평한 경쟁을 보장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위원회는 DAC 8 제안이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EU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이 전 세계적이며, 규제 회피를 위한 EU 탈퇴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고 강조
- DAC 8이 MiCA를 근간으로 하지만, MiCA와 DAC 8은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강조
- MiCA는 암호자산 관련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암호자산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MiCA 정의 밖에 존재하는 자산 및 서비스기업이 존재할 수 있음
- 하지만, DAC 8은 MiCA의 규제를 받는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 규제 대상이 훨씬 광범위하다고 강조

- EU 당국이 포괄적 암호화폐 규정안(MiCA)의 최종 승인에 이어 과세 정보공유를 통한 과세 투명성 규칙(DAC 8)을 만장일치로 도입해 암호화폐 규제에서 또 하나의 글로벌 표준을 추가했다고 평가
- 과세 투명성 규칙은 EU 27개 회원국 과세당국이 암호화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를 공유하고, 고액 자산가 세금 판결을 공유해 조세 회피와 탈세 범죄 차단을 주목적으로 함

[출처]

- Coindesk 'EU Crypto Tax Plans Include NFTs, Foreign Companies, Draft Text Shows' 2023.05.12.
- European Commission, 'New tax transparency rules will help Member States shine a light on the crypto-asset sector' 2023.05.16.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코인베이스 SEC 소송, 상공회의소 등 反 SEC 결집해 규제 완화 요구

- 코인베이스, SEC에 행정절차법 소송...법원, 코인베이스 요청 수용...SEC, 요구 거부한 채 기각 소송 제기
- 주류 언론, 암호화폐 기업과 규제기관 간 배짱 싸움이라 지적...상호 허세 버리고 진지한 협상을 주문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암호화폐 기업의 거래소 등록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 소송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비롯해 중립적 입장이던 상공회의소 등이 탄원서를 제출해 코인베이스 지원에 나서 SEC를 압박함

▶ 코인베이스, SEC에 행정절차법 소송...법원, 코인베이스 요청 수용...SEC, 요구 거부한 채 기각 소송 제기

-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규제 명확성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확대됐고, 중립적 위치에 있던 상공회의소 등이 SEC 정책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규제 논란이 더욱 복잡해짐
- 코인베이스는 '22년 7월 SEC에 어떤 토큰이 증권이 해당하는지 알려달라고 청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23년 4월 연방법원에 행정절차법(APA)* 이의 소송을 제기해 SEC의 답변을 재차 요구
 - *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연방기관이 규정을 개발하고 발표하는 절차를 관리하는 법으로 연방 관보에 제안 및 최종 규칙 제정 공지 요건과 규정 공지에 대한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 제공이 포함됨
- 당시 코인베이스는 SEC의 최근 성명과 규제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청원에 대한 답변 거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 제소를 통해 법원에 SEC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
- 코인베이스 요청은 연방 제3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SEC는 10일 이내에 코인베이스 청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23.5.12)
- 하지만, SEC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암호화폐 규칙 제정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현재로서는 집행 조치로 충분하지만, 코인베이스가 단기간에 복잡한 일정의 조정을 요구한다고 반박('23.5.16)
- 또한, 코인베이스는 정부 기관에 특정 의무이행을 명령할 권리가 없고, SEC는 청원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강조하고, 법원에 코인베이스의 청원명령 요청 소송 기각을 요청
- SEC는 코인베이스 청원 요청 기각 소송에서 해당 청원은 비정상적 규제책이며, 코인베이스는 규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
-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은 기각 소송을 제기 직전에 금융 시장 컨퍼런스에서 시민이 돈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에 따라 이익을 기대한다면, 공동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증권이라고 강조
- 코인베이스는 이번에 SEC가 법원에 제출한 내용이 증권 규제 당국이 암호자산 규제에 대해 처음 언급한 사례라고 강조하고, 더 많은 해명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
- SEC는 최근 헤지펀드 규정 발표('23.05)에서 '22년 제안에서 제시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공식 정의*를 삭제하고 현재 숙고하고 있으며, 추후 보완하겠다고 밝혀 법적 모호성 논란을 더욱 가열시킴
 - * '22년 8월 SEC는 개정안 초안에서 SEC는 디지털 통화를 분산원장을 통해 전송되는 자산으로, 가상 화폐, 코인, 토큰 등을 포함한다고 강조

▶ **상공회의소 등 반 SEC 진영, 탄원서 제출로 코인베이스 지원..SEC 집행 조치가 기업 통지권리 침해 주장**

- 코인베이스의 SEC 소송에 다수의 기업이 탄원서(Amicus briefs)*를 제출해 코인베이스를 지지하고 나섰고, 여기에 중립적 위치에 있던 미국 상공회의소*까지 가세해 反 SEC 진영이 결집한다는 평가
 - * 제3자가 특정 법정 사건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관련 정보나 조언을 통해 지원하는 수단
 - * U.S. Chamber of Commerce :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가장 광범위한 조직으로 소기업부터 세계적 기업 등 미국 전역의 300만 개 기업이 가입
- **(상공회의소)** SEC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장하면서 단편적인 집행 위주의 접근을 통해 규정을 혼탁하게 만들었고,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어떤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하고, 1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자산 경제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쳐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
- 상공회의소는 SEC 규제 접근 방식이 기업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부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통지해야 하는 기업의 공정한 통지권리와 충돌한다고 강조하고, SEC 조치는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주장
- 상공회의소는 규제 명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로우며,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중의 역할을 억압한다고 강조
- **(a16z)** 세계 최대 VC인 a16z는 SEC의 규제 정책을 단편적이라고 비난하고, SEC가 암호화폐 기업 제소를 위해 하위(Howey) 테스트를 광범위하게 산발 적용해 심각한 규제 격차와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지적
- 암호화폐 산업의 불확실성 증가는 블록체인 개발자와 사용자 간 정보 비대칭 위험을 고조 시켜 산업을 위협한다고 경고
- **(패러다임)** 디지털 자산 전문 투자 기업 패러다임은 디지털자산 업계가 와서 등록하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정착 실제 구현 수단은 없는 제약된 환경(Limbo)에 갇혀있다고 주장
- SEC 조치는 초기 산업을 마비시키고, SEC 주장을 따를 수 없거나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 없는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을 절망에 빠뜨렸다고 지적
- **(CCI)** 암호화폐 기업 모임인 혁신을 위한 암호화 위원회(CCI)*는 규제 준수를 원하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SEC의 공격적 태도는 선의의 기업과 악의의 기업을 구별하는 투자자 능력을 훼손한다고 주장
 - *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 **주류 언론, 암호화폐 기업과 규제기관 간 배짱 싸움이라 지적...상호 허세 버리고 진지한 협상을 주문**

- CNBC 등 미 주요 언론은 암호화폐 기업이 SEC와 배짱 싸움(포커 게임)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면 미국을 떠나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대담한 위협을 가한다고 평가
- 암호화폐 업계는 미 행정부와 SEC가 암호화폐 기업의 주장을 허세로 치부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업계에 취한 강경 노선을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지적
- 미 언론은 암호화폐 기업의 해외이전 주장은 엽포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실제 이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

- 미국은 암호화폐 보유자가 5천만 명이 넘는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을 떠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암호화폐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자가 혼란에 빠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분석
- 실제 리플은 '20년부터 본사를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UAE 등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코인베이스도 올 초 해외이전 고려를 밝혔지만, 한 달 만에 발언을 철회함
- 암호화폐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 조나단 레빈(Jonathan Levin) CEO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주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전망

▶ **암호화폐 기업, 미국 시장을 떠날 가능성 매우 낮다는 평가..SEC, 신중한 규제 추진으로 타협 필요 강조**

- 하지만, EU나 영국과 비교해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접근이 낙후됐다는 지적은 큰 공감을 얻고 있다고 평가
- 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규제 체계를 갖추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발등에 총을 쏘고 있다고 지적하고 EU가 미국을 추월해 훨씬 앞섰다고 평가
- 미 업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다른 관할권이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선 점을 주목
- 이러한 변화는 미국 기반의 거래소가 미국 이외의 관할권에 운영 허브 구축에 대한 새로운 선택지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고, 바이낸스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
-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최근 미국 진출이 어려워지자 영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규제 관련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 바이낸스 패트릭 힐만(Patrick Hillman) 최고 전략책임자는 미국은 지난 6개월간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지적하고, 코인베이스 관련 SEC 조치는 미국이 이상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
- 미 언론은 현재 미국 암호화폐 기업은 실현 가능성 낮은 위협을 전면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규제 당국이 신중한 규제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 코인베이스의 SEC 제소에서 상공회의소 등 외부 기업이 자발적으로 코인베이스 지지를 선언해 SEC 암호자산 규제에 대한 산업계 불만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분석
- CNBC 등 미 주류 언론은 암호화폐 기업과 SEC가 배짱 싸움을 한다고 지적하고, 다른 관할권이 미국을 추월한 만큼 상호 허세를 버리고 진지한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

[출처]

- Coindesk, 'Coinbase's SEC Complaint Draws Allies Depicting U.S. Regulator as Crypto Bully', 2023.05.12.
- Amb Crypto, 'Coinbase CEO reacts as SEC shuns need for crypto rules in its lawsuit', 2023.05.16.
- CNBC, 'Crypto companies are playing poker with the SEC as agency cracks down on the industry', 2023.05.14.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SEC 수탁 제안, 자문사와 암호자산 간 단절 요구..JP모건 등 강력 반발

- SEC, 자문사의 모든 고객자산을 은행, 신탁회사, SEC 등록 브로커-딜러 등 적격 수탁자로 한정 방침
- 사실상 투자자문사와 암호화폐 플랫폼 거래 금지 요구, 실제 운영 무시해 요건 준수 불가능 지적 제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월 공개한 새로운 커스터디(Custody) 제안에서 JP모건 등 투자자문사에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고객자산을 승인된 수탁기관에 보관하도록 요구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투자자문사와 암호화폐 플랫폼 거래 금지 요구, 실제 운영 무시한 규정으로 요건 준수 불가능 지적 제기

- 최근 의견수렴을 마친 SEC 커스터디 제안은 투자자문사의 모든 고객자산은 ▲은행 ▲신탁회사 ▲SEC에 등록된 브로커-딜러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선물 판매자와 같은 적격 수탁자로 제한
- 이러한 SEC 방침은 투자자문사가 고객자산 일부를 암호화폐 플랫폼에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JP모건, 중소기업청(SBA)* 등이 SEC 방침에 크게 반발
 -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중소기업 설립과 생존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미국 독립기관
-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자문사 및 일부 기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사가 고객자산을 부적절하게 사용, 분실,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 그는 암호화폐 플랫폼 운영을 고려할 때 투자자문사의 암호화폐 플랫폼 수탁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
- 이에 대해 JP모건은 SEC 제안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접근을 취해 수년 동안 잘 작동해온 금융 시장 운영의 상당 부분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
- 증권산업 및 금융시장협회는 관할권이 지나치게 넓어 간접적·부적절한 규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환매조건부채권, 증권 대출, 파생상품, 연금 등 각종 자산이 SE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반발
- 세계 최대 VC인 a16z는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 자산 수탁에 대한 기본 통계와 규제 접근 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아 투자자문사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
- 관련 업계는 암호화폐 수탁에 대한 연방정부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하는 신탁회사 규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SEC의 접근을 우회적으로 비난

- SEC가 새로운 수탁 규정 제안에서 투자자문사의 모든 고객자산을 은행, 신탁회사 등 적격 수탁자로 제한해 투자자문사와 암호화폐 플랫폼 간 거래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강조
- JP모건 등 투자 업계는 SEC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잘 작동하는 금융 시장 운영을 방해한다고 지적했고, 일각에서는 다양한 각종 자산이 SEC 요건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

[출처]

- Coindesk, 'SEC Blasted on Custody Proposal by JPMorgan, Crypto Firms and a Fellow Agency', 2023.05.10.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미 하원 공동 청문회, 암호화폐 규제에서 EU와 영국 주목 요구

- 업계, G20은 정교한 금융서비스 및 혁신 기술 시장 크게 활성화...미국은 규제 낙후성으로 지체 주장
- 의원, EU·영국·두바이·싱가포르·한국 사례 참조 강조...완전히 새로운 시장 구조 구축을 주문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암호자산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미국과 해외 권역 간 규제 격차가 심화한다고 지적하고, 영국과 EU의 디지털자산 규제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

▶ 업계, G20은 정교한 금융서비스 및 혁신 기술 시장 크게 활성화...미국은 규제 낙후성으로 지체 주장

- 두 위원회는 5월 10일 '디지털자산 규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공청회를 개최하고, EU와 영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의 여건과 크게 비교된다고 지적
- 크라켄 마르코 산토리((Marco Santori) 최고 법률책임자(CLO)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EU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영국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미국 규제 환경의 낙후성을 알게 된다고 강조
- 그는 다른 관할권은 실제로 크게 앞서가며, 계속 앞서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G20 관할권은 정교한 금융 서비스 시장과 혁신적인 기술 산업이 큰 호황을 누리며, 미국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지적
-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맥신 워터스 의원은 SEC와 CFTC 등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명확성이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의회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장 구조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 의원은 의회가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유럽과 스위스 등에서 훨씬 적극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해 미국의 낙후성을 인정
- 웹3 재단 다니엘 스코엔버거(Daniel Schoenberger) CLO는 스위스는 초기에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고, 스위스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산업에 법적 확실성과 명확성을 제공해 산업 도약에 기여했다고 평가
- 브라이언 스틸 의원은 ▲EU의 MiCA ▲두바이의 가상자산 전문 규제기관 ▲싱가포르와 한국의 규칙과 규정 정비 등을 참고 사례로 제시하고, 이들 권역은 이를 통해 투자와 혁신 촉진을 모색한다고 강조
- 하원은 디지털자산 규제, 은행 파산, 연방 금융 규제기관 감독 등을 주제로 연이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

- 미 하원의 디지털자산 규제 청문회에서 업계 종사자와 의원들은 G20 관할권은 정교한 금융서비스와 혁신적인 기술 산업이 큰 호황을 누리지만 미국은 규제 낙후성으로 상당히 뒤처졌다고 지적
- 하원 의원은 EU의 MiCA, 두바이의 가상자산 전문 규제기관 도입, 싱가포르와 한국의 규칙 및 규정 정비 등을 참고 사례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시장 구조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출처]

- Cointelegraph, US lawmakers hold EU and UK as examples of crypto regulation in joint hearing , 2023.05.10.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EU]

유럽 블록체인 업계, 스마트계약 관련 EU 데이터 법 협상에 총력

- 데이터법, 오는 6월 합의를 거쳐 본격 입법화 일정...스마트계약 중지 등 요구해 불변성 훼손 우려 제기
- 업계, 협상에서 규정 명확화 추진...EC, 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 강조하며 스마트계약 규정 강화 강조

유럽 암호화폐 업계가 EU 데이터 법*의 모호성 때문에 스마트계약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EU는 기술과 무관하게 스마트계약에 대한 높은 요구 사항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함

* Data Act : IoT와 연결된 제품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접속·공유·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지난 2월 유럽의회가 의결

▶ 업계, 협상에서 규정 명확화 추진...EC, 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 강조하며 스마트계약 규정 강화 강조

- EU 데이터법은 IoT에서 생성된 데이터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 공유를 위한 스마트계약에 대한 필수 요건을 제시해 업계 이목 집중
- 법안은 스마트계약의 접근제어, 중지, 재설정 등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스마트계약의 불변성과 자동화 컴퓨팅 프로그래밍 특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 제기
-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데이터법 채택을 승인했고, 현재 유럽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서 데이터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3자 회담을 통해 데이터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
- 블록체인 및 탈중앙화 업계는 유럽이사회와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스마트계약 규제에서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런 법적 모호성이 산업 근간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
- 업계는 협상을 통해 스마트계약을 위협하는 기술 규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EC는 스마트계약에서 기술 규제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언급
- 집행위원회는 스마트계약 규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든 전통 데이터베이스 기반이든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요구 사항 설정을 추진한다고 강조
- 업계는 데이터 법 준수를 위해 공공 블록체인에서 스마트계약을 사용하는 상황을 최악의 경우로 상정
- 6월 말 데이터법 3자 합의가 이뤄지면, 유럽의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이사회 회원국 승인이 추진될 예정

- EU가 올 6월 합의를 추진하는 데이터법이 스마트계약의 불변성과 자동화 프로그래밍 특성을 크게 훼손해 산업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섬
- 업계는 협상을 통해 법적 모호성 해소를 기대하고 있지만, EC는 스마트계약에 사용되는 기술 규제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원칙을 유지한 채 높은 수준의 요구 사항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언급

[출처]

- DL News, European regulators pushed to scrap smart contract laws that would kill DeFi, 2023.05.08.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세계은행, '인프라 산업 토큰화' 주목..제2의 녹색 채권 가능성 평가
2. 美 하원, 암호화폐 명확성을 위한 '증권 투명성 법안' 발의
3. FATF, G7에 암호화폐 규제 강화로 불법 자금거래 퇴치를 촉구
4. 美 CFTC 의장, 분산화 거래소도 규제 방침..코드 설정 주체가 대상
5. 美 법원, SEC vs 리플 소송에서 SEC의 증거 봉인신청 거부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세계은행, '인프라 산업 토큰화' 주목...제2의 녹색 채권 가능성 평가

- 인프라 산업 자산 토큰화, 블록체인 기반 자금 조달 방식을 혁신하고 공정하고 민주적 민간 참여를 보장
- 디지털 토큰 및 스마트 계약의 취약한 법적 지위, 글로벌 표준 부재 등을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제시

세계은행이 에너지 등 인프라 산업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 토큰화 방안을 제시하고,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 혁신과 민간 시장의 접근을 민주화하는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

▶ 세계은행, 인프라 산업 토큰화 방안 제시...자금격차 해소, 투명성 제고, 투자 민주화 등 효과 제시

- 세계은행*이 도로·발전소·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도입 모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프라 산업 토큰화를 통한 민간 투자 유치, 재정 격차 완화 방법 등을 제시
 - * World Bank :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 대한 정부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하는 국제 금융기관
 - * 'Infrastructure Tokenization, Does blockchain have a role in the financing of infrastructur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2023.5
- 보고서는 현 글로벌 인프라 산업 당면과제를 ▲민간 투자 감소로 인한 재정 격차 심화 ▲불투명한 예산 프로세스 ▲낮은 프로젝트 추적성 등으로 보고, 블록체인을 통한 토큰화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안
- 인프라 산업 비영리 기구인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허브(GI Hub)*는 '18년~'40년까지 인프라 산업에 15조 달러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매년 약 3~4조 달러가 인프라에 지출되지만, 대부분 각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지적
 - * Global Infrastructure Hub(GI Hub) : G20이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포용적인 인프라 제공을 위해 구성된 비영리 조직으로 인프라 의제 관련 데이터 인사이트 생성, 지식 공유, 국제협력 연결 등의 임무를 수행
-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지만, '19년 민간 투자는 1,06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0.13%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10년 1,560억 달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인프라 산업 투자의 민간 참여율]

(USD bn)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value	322.2	291.5	247.4	283.4	339.1	413.4	409.6	530.8	570.9	513.4
Primary markets	205.7	169.0	129.9	121.2	150.7	146.4	137.6	118.4	122.3	127.9
• Private	156.2	131.3	105.4	103.0	123.7	118.0	118.7	93.2	99.9	105.9
• Public	49.5	37.7	24.4	18.2	27.0	28.5	18.8	25.2	22.4	22.1
Secondary markets	116.6	122.5	117.5	162.2	188.4	266.9	272.0	412.4	448.7	385.4
• Private	106.2	117.5	111.3	159.6	178.8	257.3	265.2	406.0	438.1	377.5
• Public	10.3	5.1	6.2	2.6	9.6	9.6	6.8	6.4	10.6	7.9



- 또한, 대다수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최소 투자 규모가 100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어 기관이나 초고액 자산가만 참여할 수 있어 재정 격차를 심화시킴
- 세계은행은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블록체인 활용 모델을 제2의 녹색 채권*으로 여기고 적극적인 모델 개발 및 분석 작업을 진행
 - * Green Bond :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을 의미하며, 세계은행은 '08년 녹색 채권을 발행해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사업,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함
- 우선 ①인프라 유가증권을 토큰화해 자금 격차 해소하는 방안과 ②예산(Budget) 레벨에서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활용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외에도 ▲발행 비용 절감 ▲더 많은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접근성 개선 ▲데이터 공유를 통한 분쟁 완화 등의 효과를 제시

▶ 자산 토큰화, 블록체인 기반 자금 조달 방식을 혁신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민간 참여를 보장

- **(블록체인 기반 자금 조달)** 토큰화된 인프라(블록체인)를 사용하여 인프라 산업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주식, 부채 금융 등 자산의 디지털화(자산의 토큰화)는 포용적 경제 성장과 복지를 통한 장기적 사회 이익 창출과 저탄소 전환에 기여한다고 평가
- 하지만, 빈약한 거버넌스와 복잡한 인프라 시스템 관리, 프로젝트가 자본 집약적이고 즉각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점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 인프라 확장 문제는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및 관리 효율성은 분산화, 불변성, 투명성 등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기능을 활용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진단
-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 일치 ▲민간 금융 활용과 자본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혁신적 매커니즘 도입 ▲투명한 데이터 제공 등이 중요하다고 진단
-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실물 자산 토큰화*를 주목하며 ▲비유동 자산의 거래성 향상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불필요 중개의 제거 ▲투명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
 - * 세계은행은 토큰화를 자산 소유권의 단위인 권리, 부채 또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의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로 정의

[인프라 산업의 블록체인 도입 효과]

프로젝트 관리 개선	투자 환경 개선
계약 표준화	금융 공학, 위험 할당 및 완화
재무 표준화	규제 프레임워크와 자본 시장
프로젝트 준비	품질 인프라
데이터 격차 해소	-

출처 : World Bank, Infrastructure Tokenization

- 인프라 프로젝트의 토큰화는 ▲자금 조달 이니셔티브 ▲인프라 민주화 ▲인프라 관리 효율성 증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상호연결되고 실현된다고 분석

▶ **디지털 토큰 및 스마트계약의 취약한 법적 지위, 글로벌 표준 부재 등 새로운 문제 고려 필요**

- 인프라 산업의 블록체인 도입은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지만 법적·기술적 제약이 존재
- 현지 규정 적용이 가능한 증권과 달리 토큰화 거래는 발행자와 규정 준수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전산 인프라 남용 ▲투기적 차익 거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새로운 문제가 다수 등장함
- 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두드러진 위험은 대부분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규제와 관련된 문제이며 이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
- **(다양한 증권 유형의 토큰화)** 인프라 산업 토큰은 인프라 자산의 소유권, 자산 소유 기업의 지분, 지분이 확보한 부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증권 유형과 소유권 이익 형태가 존재
- 토큰화되는 증권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며, 증권 규정은 관할권마다 다르며,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빈번함
- **(법적 명확성 및 거버넌스 부족)**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AML/KYC) 요구, 관리 권한, 2차 시장과 통합 등에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
- 세계은행은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한 행동 강령과 토큰화 표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산기술의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
- **(디지털 토큰의 법적 지위)** 전 세계 대부분 관할권은 인프라 산업 토큰을 독립적인 투자로 인정하지 않아 법적 지위가 취약하며, 탈중앙화 거래소(DEX)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짐
- 대다수 인프라 산업 토큰은 DEX나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군에 2차산업 유동성을 제공하는 공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함
- **(스마트 계약 법적 상태)**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으로 사람 개입 없이 블록체인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미리 설정된 계약을 구현하지만, 스마트 계약을 공식 계약으로 규정한 관할권이 없음
- 대다수 관할권은 스마트 계약의 기술 중립성 유지 문제와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여러 표준 및 기능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
- 이 때문에 스마트 계약은 아직 시행 가능성이 부족하고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이버보안 문제)** 스마트 계약의 자동화 및 불변성 등의 특징은 사이버 해킹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투자자가 사기 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
- 사이버보안 보장을 위해서는 토큰이 AML/KYC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유권 추적을 위해 토큰 거래소와 협력해 소유권에 책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사이버보안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전문가 감독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발행자 비용 증가로 이어짐

▶ **증권형 토큰 혁신, DLT 기반 증권에 대한 선진적 법적 프레임워크 필요...미, 프랑스, 리히텐슈타인 등 주목**

- 블록체인 기술은 현 인프라 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했고, DLT 기반 증권에 대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갖춘 국가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토큰 경제를 통한 혁신 추진이 가능

- **(미국)** '19년 28개 주에서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도입했고, 27개 법안과 결의안이 제정 및 채택됨
- '20년 9월, 통화감독청(OCC)는 미 국내 은행에 ▲위험의 효과적 관리 ▲AML 규정 준수 ▲은행비밀법(BSA) 준수 등을 조건으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허용
 - * Bank Secrecy Act : OCC는 미 금융 기관에 유가증권의 현금 구매 기록을 보관하고, 10,000달러(일일 총액)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금 세탁, 탈세 또는 기타 범죄 활동 등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를 요구
- **(룩셈부르크)** 인프라 산업 토큰화가 가장 발달한 관할권으로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중개 프로세스 간소화 등 국가에 가장 적합하고 유익한 블록체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 설계됨
- **(리히텐슈타인)** '20년 블록체인 법(토큰과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제공자 법*)으로 알려진 선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전 세계 최초로 토큰 경제 전용의 종합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 * Token and Trusted Technology Service Provider Act(TVTG) : 토큰 경제의 고객보호 및 자산 보호와 연결된 민법 문제를 규제한 세계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
- **(스위스)** '20년 DLT법을 통과시켜 디지털 증권을 공식 인정했고, 리히텐슈타인과는 달리 기존 민법을 수정해 금융 시장 인프라법, 은행 파산법 등을 모두 담은 포괄적 법률을 도입
- **(프랑스)** '17년 분산원장기술 명령(DLT Order)*을 도입해 비상장 금융 증권의 발행과 전송을 허용했고, '19년 기업 혁신에 관한 법(PACTE Law)**을 제정해 블록체인 산업을 공식 인정
 - * 동 령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에 DLT 발행 및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블록체인 앱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
 - ** 기업이 정신과 혁신을 장려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
- **(EU)** 포괄적 암호자산 규정(MiCA) 도입을 최종 결정했고, 프랑스 규제 영향을 많이 받아 자산 자체보다는 플레이어 규제에 초점을 맞춤
- MiCA는 암호자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발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이미 기존 EU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는 증권형 토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개발 도상국, 인프라 산업 취약점을 블록체인으로 보완 가능...유동성·접근성 강화로 민간 참여 유도 가능**

-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EMDEs)은 인프라 산업의 파일럿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등에서 뒤처져 있어, 블록체인을 통한 인프라 산업 토큰화가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개발도상국이 인프라 산업 토큰화 도입에서 검토할 사항]

구분	내용
규제 조화	- 글로벌 시장의 주류 채택을 위해 각 권역의 증권형 토큰공개(STO) 규제를 조화시켜야 함 -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업데이트로 자산 기반 토큰 및 스마트 계약의 법적 지위 확립을 추진
파일럿 및 샌드박스	- 실용적 통찰력을 확보하고 실제 환경에서 장점과 제약을 테스트하기 위해 유망 사용 사례에 대한 파일럿 및 규제 샌드박스를 개발
역량 구축	- 토큰화는 초기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역량, 국제 협력 역량, 토큰화 기회 및 위험 평가 역량 등이 필요

출처 : World Bank, Infrastructure Tokenization

- 개발도상국의 토큰화는 ▲인프라 자산 유동성 개선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 개방 ▲인프라 산업 개발에 대한 참여 확대 등으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EMDEs 정부는 감사 자동화, 프로젝트 모니터링 향상, 조달비용 절감, 실사 및 거래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행정 및 재정 효율화 구현이 가능

▶ **세계은행, 자산 관련 암호화와 토큰화 증권 구분 강조...혁신 위해서는 인프라 산업 증권 토큰화 필요 결론**

- 세계은행은 자산 클래스로서 암호화와 토큰화된 증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큰화된 증권에서 블록체인은 디지털 수단 또는 기술 지원자 역할만 한다고 구분
 - * 이러한 접근에서 토큰화된 자산과 부채는 전통적인 오프체인 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
- 인프라 산업의 토큰화 도입은 토큰화 증권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고 관할별로 토큰화 증권 수용 범위가 다른 것이 가장 큰 장벽
- 인프라 산업 자금 조달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소매 투자자의 접근을 제한했던 기존 접근을 얼마나 민주화하느냐에 확산 여부가 달렸지만 현재 인프라 산업 토큰화 프로젝트는 공인 투자자만 접근이 허용됨
- 보고서는 금융에 적용된 블록체인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세계은행이 금융 규제 변화를 주도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리더십 확보하고, 암호화폐 생태계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산업 토큰화 참여를 권고

- 세계은행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자산의 토큰화는 블록체인 기반 자금 조달 방식을 혁신하고 공정하고 민주적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
- 아직 디지털 토큰과 스마트계약이 법적 지위가 취약하고 글로벌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토큰화를 통해 인프라 산업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

[출처]

- Coingeek, 'World Bank turns to blockchain for tokenizing infrastructure process amid regulatory challenges', 2023.05.21.
- Ledger Insight, 'World Bank explores tokenizing infrastructure projects', 2023.05.15.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하원, 암호화폐 명확성을 위한 '증권투명성 법안' 발의

- 증권 계약과 약정에 따른 판매 자산을 구분, 증권 규제 명확성을 높여 혁신·국제 경쟁력 강화를 모색
- 법안, 초기에는 증권이지만 점차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변모하는 디지털자산 특성을 반영했다는 평가

암호자산의 증권 여부를 둘러싸고 SEC와 암호화폐 업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하원의 톰 엠머(Tom Emmer)와 대런 소토(Darren Soto) 의원이 디지털 자산의 증권 분류를 명확히 하는 증권 투명성 법안*을 발의해 주목

* Securities Clarity Act : '20년 첫 발의됐으나 처리가 무산됐고, 이번에 톰 엠머 의원과 대런 소토 의원이 재발의함

▶ 하원의원,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부족은 산업의 중대한 도전이라 지적...산업의 혁신을 위해 재발의 주장

- 두 의원은 성명서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 부족은 산업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하고, 무엇이 상품이고 무엇이 증권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미국의 혁신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
- 증권 투명성 법안은 지난 '20년 이미 한차례 발의됐으나 처리가 불발됐고, 이번에 SEC와 코인베이스가 증권 분류를 둘러싸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관심이 집중됨
- 법안은 투자 계약에 따른 판매·양도로 생성되는 자산을 투자 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이라는 새 개념을 제시해 증권 정의에서 투자 계약 자산을 제외하도록 증권법 개정을 제안
- 현행 증권법은 투자 계약이 증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모호하지만, SEC 등은 이를 근거로 투자 계약에 따라 형성된 자산까지 증권으로 간주해 규제 불투명성이 크게 높아짐
- 새 법안은 증권 계약 당시 증권이 아닌 모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매각 또는 양도 후에도 증권이 아닌 것으로 규정
-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자금 조달 단계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지만, 정작 프로젝트가 성숙해지고 탈중앙화되면 더 이상 증권에 속하지 않는 문제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음
- 에머 의원은 투자 계약 자산과 증권 계약을 구분하지 않으면 초기에 증권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한 토큰 프로젝트는 탈중앙화 이후에도 여전히 증권 굴레에 갇혀 토큰 유용성이 사장되고, 혁신이 저해된다고 강조
- 그는 증권법 개정을 통해 유형 또는 무형 자산(디지털 형태의 자산 포함)을 불문하고 증권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산 중 증권법에 따라 증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자산은 매각 또는 양도 후에도 증권이 아닌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
- 이를 통해 투자 계약 자산을 증권 계약과 구분해 기술 중립적인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증권으로 간주되는 모든 계약과 판매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

▶ **증권 투명성 법안, 초기에는 증권이지만 점차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변모하는 디지털자산 특성을 반영**

- **(배경)** 디지털 자산 시장은 자본 조달 및 수익 창출방법 중 하나로 투자자에게 디지털자산 또는 해당 프로토콜에 사용될 토큰 제공을 대가로 블록체인 기반 프로토콜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계약이 존재
- 이러한 자금 조달 약정은 증권법 제2조(a)에서 정의한 '투자 계약'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약정에 따라 판매되는 기초 자산은 본질적으로 증권법이 정의하는 증권이 아닌 경우가 많음
- 법안은 투자 계약에 따라 판매된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
- 이미 연방 법원은 판례에서 일관되게 '증권법상 투자 계약은 한 개인이 자신의 돈을 공동 기업에 투자하고 발기인 또는 제3자 노력으로 이익 창출을 꾀하는 계약, 거래, 계획을 의미하며, 투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 해당 계약, 거래, 계획에 따라 판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 **기존 증권 계약과 판매 자산을 동일시하는 접근,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고 지적**

- 증권 계약과 해당 계약 또는 계획에 따라 판매된 자산을 동일시 하는 접근은 전 세계 주요 관할권 접근방식과 다르며 미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고 지적
- 또한, 디지털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투자 위축과 산업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 법안은 유형 또는 무형자산에 상관없이 증권이 아닌 자산은 투자 계약에 따라 판매되거나 양도 되더라도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이를 통해 투자 계약 자산이 초기에 포함됐던 증권 계약에서 분리해 기술 중립적인 정의와 분류 기준을 새롭게 제시
- 디지털자산 규제 분류를 명확히 하여 투자자에게는 시장 명확성을, 규제 당국에는 명확한 관할권 경계를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

▶ **엠버 의원, 증권 구분을 명확히 한 증권법 개정이 미국의 혁신 촉진과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주장**

- 법안은 암호화 프로젝트가 규정을 준수하면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환경 구현을 위해 기존 증권법 개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차세대 인터넷 시대에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
- 엠버 의원은 기업가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해 정확한 위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증권 투명성 법안은 이러한 부문에서 기업에 해답을 제시한다고 강조
- 특히, 미국 투자자들이 소비자 보호를 훼손하지 않고 흥미진진한 기술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고, 이는 미국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 소토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이 성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기여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주장
- 또한, 법안은 새로운 정의와 관할권을 추가하여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에 확실성을 부여한다고 강조하고, 고객과 투자자의 재정적 안녕 보장과 미 경제의 가상화폐 잠재력 극대화에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 디지털자산 규제에 규제 명확성 제공 평가...적극적 환영 의사 발표**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도 증권 계약과 기초 자산을 구분하는 법안의 접근방식을 크게 환영
- 디지털 상공회의소 페리안 보링(Perianne Boring) CEO는 증권 투명성 법안은 투자 계약과 투자 계약 조건에 따라 판매 및 양도되는 디지털자산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투자자, 소비자,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평가
- 거래소 업계도 이번 법안은 증권법이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접근이며, 암호화폐 산업에 방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
- 블록체인 협회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CEO는 증권 투명성 법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 취급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협회는 이 법의 재도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언급
- 토큰에 대한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 구축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직면한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는 평가 속에, 증권 투명성 법이 관련 위험을 크게 낮춘다고 지적도 제기
- 암호화폐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셸라 워렌(Sheila Warren) CEO는 "디지털자산 증권 정의가 모호한 것은 미국 암호화폐 기업에 계속해서 큰 도전 과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를 통해 투자 계약과 기본 자산 또는 토큰의 구분이 명확해질 수 있다고 평가

- 미 하원에 암호자산의 증권 포함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증권 계약과 증권 계약에 의해 판매·양도된 자산을 구분하는 '증권 투명성 법안'이 발의됐고,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음
- 법안 발의 의원은 디지털 자산 규제 분류를 명확히 하여 투자자에게는 시장 명확성을 규제 당국에는 명확한 관할권 경계를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는 이러한 접근을 환영

[출처]

- Blockworks, "American Innovation Will Suffer": Lawmakers Demand Clear Rules For Crypto' 2023.05.20.
- emmer.house.gov, 'Emmer and Soto Introduce Bipartisan Bill to Provide Regulatory Clarity for Digital Assets', 2023.05.18.
- crypto.news, 'Bipartisan Securities Clarity Act re-introduced amid crypto regulatory challenges', 2023.05.19.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FATF, G7에 암호화폐 규제 강화로 불법 자금거래 퇴치를 촉구

- 전 세계 27개국만이 표준 준수, 일부 G20도 암호화폐 규제 미적용 한다고 지적...G7의 역할 증대를 주문
- 수익 소유권 투명성 보장, 범죄 수익금 환수제 도입을 제안...규제 환경 개선 위해 트레블 룰 도입 추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G7을 상대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자금 퇴치를 위해 업데이트된 FATF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통한 불법 자금거래 퇴치를 촉구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1989년 파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설립됐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정책 개발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전 세계 27개국만이 표준 준수, G20도 암호화폐 규제 미적용을 지적...G7의 전향적 역할 증대를 주문**

- FATF 라자 쿠마르(Raja Kumar) 대표는 히로시마 G7 정상 회담을 앞두고 규제를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및 산업 전반의 의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발표
- 쿠마르 대표는 전 세계에서 불법 금융 거래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G7이 아직까지 무법천지인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더 적극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
- FATF는 업데이트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금지 권고안에 암호화폐 자산 및 관련 금융 활동이 포함됐다고 강조하고, 범죄·테러를 조장하는 '디지털 금융 흐름' 근절을 위해 '안전한 피난처'를 퇴치하는 공동의 글로벌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
- 쿠마르 대표는 새로운 표준을 준수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27%에 그쳐, 대다수 국가가 아직 암호화폐 산업의 감독에 나서지 않았고, 여기에는 G20 일부 국가도 포함된다고 주장
- 또한, 업계는 암호화폐 거래 0.1%~15.4%를 불법으로 추정하지만 이는 너무 낮은 수치라고 지적하고, 트레블 룰*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불법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
- * travel rule : 거래소 등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서로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감독 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규정
- FATF는 불법 자금거래 퇴치를 위해서 ▲수익 소유권 투명성 보장 ▲범죄 수익금 환수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자산 환수가 경제범죄 차단에 효과적이지만, 대다수 국가가 자산 환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

- FATF가 G7 정상 회담을 앞두고 불법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일부 G20 국가가 암호화폐 규제를 미적용하는 등 규제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G7이 암호화폐 규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
- FATF는 트레블 룰 등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세계 각국 정부에 수익 소유권 투명성 보장과 범죄 수익금 환수제 도입을 통한 불법 자금거래 퇴치에 나설 것을 촉구

[출처]

- Coindesk, 'G-7 Must Take Charge in Ending 'Lawless' Crypto Space, FATF Chief Says', 2023.05.18.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CFTC 의장, 분산화 거래소도 규제 방침..코드 설정 주체가 대상

- 분산화 암호화폐 거래소, 코드로 자체 실행되더라도 규제 대상...업계의 규제 불가능 주장을 전면 부정
- 대다수 디지털 자산, 미국 법에 따라 규제 적용...토큰 프로젝트가 상품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예외 인정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 위원장이 탈중앙화 금융(DeFi) 암호화폐 거래소가 코드 기반 자체 실행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현행 법에 의해 규제할 방침이라고 언급

▶ CFTC, 대부분 디지털 자산은 법에 따라 규제 가능..토큰이 탈중앙화로 진화한 경우는 규제 공백 인정

-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가 완전히 분산된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기존 증권법 규정에서 벗어나게 되어 규제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규제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 하지만, 베남 위원장은 개인도 기업도 없이 코드만 있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시각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하고 미국 소비자가 무엇을 제공받고 어디에 노출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
- 위원장은 분산화된 제품과 자체 실행 코드를 설정한 법인이 개인이 누구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
- 지난 3월 CFTC는 바이낸스를 상품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제소했고, 거세게 반발하던 바이낸스 경영진이 최근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 CFTC 규제 방침에 관심이 집중됨
- 위원장은 미국 법은 이미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
- 그는 투자 계약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언급하며 법적 판례에 따라 법적 분석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것이 좋은 나쁜든 오늘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분석의 근간이라고 주장
- 하지만, 베남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자산은 전통 금융 자산과 다른 고유한 특징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규제 방식과 규제 여부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인정
- 위원장은 토큰은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자금 조달 행위가 증권에 해당할 수 있지만, 토큰이 탈중앙화 등으로 진화한 경우에는 어떤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규제 공백을 인정

- CFTC 베남 위원장이 디파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완전히 분산화된 방식으로 자체 실행되더라도 해당 서비스와 코드를 설정한 주체에 대한 규제 적용 방침을 언급
- 베남 위원장은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은 미국 법에 따라 규제되지만, 증권 형태로 시작한 토큰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로 상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어떤 규제를 적용할지 아직 미지수라고 평가

[출처]

- Decrypt, 'CFTC chair says DeFi crypto exchanges will be regulated even if they are 'just code' , 2023.05.18.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법원, SEC vs 리플 소송에서 SEC의 증거 봉인 신청 거부

- SEC vs 리플 소송, 과거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SEC 문서 공개로 격돌
- SEC, 전 임원의 개인적 견해라고 주장...법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판단해 공개 방침

미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소송에서 과거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자료의 봉인 신청*을 거부하고, 공공 기관이 밀접하게 연계된 사법 문서라고 판결

* motion to seal : 변론 일부 또는 법원 제출 전체 문서를 기밀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

▶ **SEC, 전 임원의 개인적 견해라고 주장...법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판단해 공개 방침**

- '20년 12월 SEC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리플(Ripple)이 자체 발행한 리플토큰(XRP Token)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개됨
- 최근 양사는 '18년 당시 빌 하이먼(Bill Himan) SEC 이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연설*과 이에 대한 근거가 담긴 문서의 공개를 둘러싸고 충돌
 - * 힌더 이사는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 이더리움 네트워크, 탈중앙화 구조 등을 바탕으로 고려할 때 이더리움 생성 자금 도달외에 이더리움의 제공 및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언급
- '21년 리플은 하이먼 이사 주장을 근거로 SEC가 그동안 암호자산을 증권으로 보지 않았고 이에 따라 XRP도 증권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정보 자유법에 따라 주장 근거가 담긴 문서 공개를 요청
- 이에 대해 SEC는 하이먼 이사 주장은 SEC 공식 정책이 아닌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관련 문서는 내부 심의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법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봉인 신청을 요청
- 하지만, 이번에 법원은 SEC 봉인 신청을 거부하고, 해당 문서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법 문서라고 판결
-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는 이번 법원 결정은 투명성을 위한 또 하나의 승리라고 강조하고, 수정되지 않은 하이먼의 이메일을 통해 SEC의 본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
- 지난해에도 SEC는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해 봉인 신청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거부함

- 미 법원이 SEC와 리플 간 소송에서 과거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SEC 이사의 연설과 해당 주장 근거 문서를 기밀로 유지해 달라는 SEC 요청을 거부
- 리플은 관련 연설이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관련 문서가 내부 프라이버시 법 보호 대상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문서가 공공 기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법 문서라고 판결

[출처]

- Decrypt, 'Judge Denies Motion to Seal Hin man Documents in Ripple SEC Case', 2023.05.17.